

제 1526호(99. 12. 28)

/ 278

- 1면 ·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 사상전향 요구하는 법원 - “보안관찰처분 적법 판결”
-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광화문 점거 기습시위 -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2면 · <인권시평> 밀레니엄, 그리고 여의도 ‘농성 천막촌’ (이제훈, 한겨레 기자)
- 주간인권흐름(12월21일~28일)

제 1527호(99. 12. 29)

/ 280

- 1면 ·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범 통과 -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저무는 99년, 끝나지 않은 싸움 - 해고·산재노동자 단식농성 계속
- “내 아들을 살려내라” -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에 항의집회 열려
-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 2-4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년 인권 10대 뉴스

제 1528호(99. 12. 30)

/ 284

- 1면 · 인권하루소식 99년 중간사
- 2면 · 만화로 되돌아본 1999년 한국의 인권
- 3·4면 · 99년 12월 총목차(1508~1528호)

인권하루소식

99년 7월

(제 1402호 ~ 1424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1일(목)

제 140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빗발치고 있다. 7월 6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여 앞둔 30일, 민주화운동 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형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 인사들은 "97년 11월 서 씨가 구속될 당시의 이유로 대두됐던 <레드헌트>에 대해 이미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터에 검찰이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해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 받은 악법"이라며 "서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법치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대중 대통령과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서 씨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은 현재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과거 양심수들과 장기수에게 자의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살바도르의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틴 바로 기금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권고하며, 이

런 법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인권위원회·햇라인 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서 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폐지 혹은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선고 공판에 쏠리는 높은 관심은 △인권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악법에 온몸으로 맞서온 인권운동가에 대한 선고인 점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내린 점 △이로 인해 선고 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서부지원 407호에서 열린다.

잊혀진 사람들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

해직교사의 쓸쓸한 사무실에/ 제자들이 찾아오는 날은/ 복사 꽃이 필니다(중략)/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눈물로 만납니다/ 반가움보다 눈물이 먼저 앞서고/ 돌아가고 난 뒤의 빈자리가 너무 커/ 아직도 우리는 아물지 않은 상처로 만납니다(중략)/ 올해도 해직교사의 스승의 날은 옵니다. - 도종환 씨의 '해직교사의 스승의 날' 중에서 -

화요일 오전마다 장형선(39, 전 경남창영여자고등학교 일본어 교사) 씨는 교육부로 향한다. 어느새 6달째로 접어든 '해직교사 완전 복직과 임용제외자 발령 촉구' 교육부 항의집회. 친숙해진 선생님들이 다가와 안부를 묻는다. 이들은 적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20년이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교사들이다. 장 씨는 전교조 활동으로 파면된 후 지난 10년동안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잘못해 벌을 받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했다. 여러 차례의 고비 끝에 드디어 지난해 복직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사무적으로 서류가 누락돼 복직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실수였으니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관련 복직은 끝났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그렇게 전교조 활동으로 파면돼 복직을 거부당한 사람만 26명이다. 또한 시국사건과 사화 민주화 투쟁으로 파면된 이들 역시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된 신우영(53, 전 서울 우신중고등학교 윤리 교사) 씨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육'을 기대하며 20년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사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다 학교측에 의해 해임된 김영미(전 경기여상 교사) 씨도 아이들 곁에 돌아갈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직교사의 복직기준을 '전교조' 관련여부뿐만 아니라 판단하여 부당함에 항거한 교사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7월 1일)은 전교조가 출범 10년만에 합법화를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교문 밖에서 이를 바라봐야 하는 해직교사 199명이 남겨져 있는 한, 전교조의 진정한 합법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1억평이나 되는 우리 땅을 공짜로 쓰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분명 우리 땅인데 우리가 잠깐 빌려 쓰려면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것도 이따금씩 인상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주변 지역에선 소음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강간과 살인, 강도와 폭력을 당하는 일이 술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의 그들은 남한 전역에 96개의 기지를 깔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주인행세를 하며 이렇게 '원더풀 코리아'를 외쳐왔다: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지역이라고 믿고 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바로 눈앞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기동훈련장과 광대한 자유사격장이 DMZ 이북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세금도 달라고 하지 않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미군기지 중의 하나이다(1978년 미하원군사위원회 보고서 중에서)"

위와 같은 미군 주둔의 폐해에 맞서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들이 제일 처음 제기한 질문은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가이다. 주인노릇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군 주둔과 그 지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결정은 애초부터 존중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미행정협정으로 통용되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평등한 국가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가장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단 1건도 구속된 적이 없는 형사관할권 문제나 타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방위비 분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땅 안에서 스스로를 식민화 시키고 있다. 유엔헌장에서 최초로 '권리'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자결권'은 이후 양대 국제인권협약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국제법으로 자리잡은 자결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자결권의 성격은 반식민지성에 있다. 한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위의 결정은 관련된 인구의 자발적인 소망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이 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무법화'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조폐공사 파업유도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다른 사업장의 파업유도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공안탄압 진상조사 결과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민주노총 관련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공작적 노조탄압의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작적 노조탄압의 대표적 유형은 △공공연맹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으로 나타난 주요연맹 지도부에 탄압 △ 장은증권, 원자력 병원, 한국중공업 등 금속연맹, 조폐공사,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사례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관련 공안검찰, 금감원 등의 공작적 개입 △ 강원산림, 영창약기, 삼환기업 등에서 나타난 검찰개입에 의한 주요노조 파괴공작 △ 통일중공업, 성남일용노조 등에서 나타난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검찰의 노조탄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공안검찰과 경찰력을 앞세운 불법탄압사례 중 범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최소한 3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구태의연한 공작적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상조사위원장 박석운 씨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문제는 이제 조사가 아니라 처벌만이 남은 상태"라며 "필요한 것은 유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며 이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지닌 한나라당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의원 등은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구속에 썩기

법원,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의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한
무죄선고 촉구 팩스 보내기 운동**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팩스 보낼곳: 청와대 770-0253 법무부 503-3532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오준석 판사 704 406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일(금)

제 140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그 첫 활동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인문운동 시민연합 이사장), 이부영(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문정현(신부) 등이 참여한 '지문날인 거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 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제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경계했다.

앞으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재의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취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현 법률 규정에서도 주민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채취해야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인사들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해 국제적 비난대상이 된 일본은 92년 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한데 이어 지난 5월 외국인 지문날인폐지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폐지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사회진보연대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2-778-4001)

농촌을 살리자

전농, 농가부채탕감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1일 성명을 내고 "저농축산물 가격정책과 IMF사태로 농민들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는 아반도주와 자살 등의 방식까지 택하고 있다"며 "농가부채탕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와 1조원 이상의 지원 등은 여론용에 불과해 농가부채탕감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단을 통한 농가부채대책 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적극적인 부채탕감에 나서 농민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98년 농가경제조사를 내놓고 97년에 대비해 98년도 농사소득은 12.7%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30.7% 증가했다고 밝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한미투자협정, 결국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필자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능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미 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투기 놀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언제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시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조치에 의해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이 폐지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초국적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기 활동'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외자유치'가 결코 한국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것이 대부분은 국내 주식·외환시장에 대한 '투기' 형태이며, 그나마 생산부문에의 투자는 것도 신규 설비투자라기 보다는 자신의 경쟁자를 먹여치우는 M&A(인수합병)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는 것이 본질적으로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과도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한미투자협정의 초안은 외국인투자자 및 초국적자본의 권리를 무한대로 보장·보호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철폐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 초안에 따르면, '투기'조치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 등-의 부과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당치도 않은 예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계 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인데, 캐나다정부는 MMT가 국민 건강에 유해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캐나다정부를 제소하였고,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하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인 제프리 존스는 투자협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미자유무역시대 체결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때 공식 안전화 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 한미자유무역시대인데,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 민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오늘도 명동성당에선 영화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불모로 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땀방울은 머리위로 내리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거나 국가가 보유해 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초국적 투기자본의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유통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구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업 희생이 예상되는 점 등이다.

이러한 약조건은 협정기간인 10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그이전의 투자에 대해서 계속 보호해야 할 의무(한미투자협정 제 16조)'를 가짐에 따라 '한미투자협정'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3일(토)
제 140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재소자에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김이 지급돼 '집단 배식 거부운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6월 18일 경 유통기한이 98년 7월 30일까지라고 표시된 김이 배식되어 물의를 빚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재소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배식을 거부하며 집단 반발 하였는데도 또 다시 똑같은 김이 배식되었다"며, "용도과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소자들은 업자와 교도관간의 결탁과 담당교도관이 김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배식을 거부하는 한편 △용도과장을 포함한 관련자 징계 및 진출 △ 거래처 교제 △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한 사태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교도소 용도과 물품구입담당 배유수 씨는 "문제의 김을 곧바로 반품 교체 처리했고 거래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6월28일 공문을 대구 농산물유통공사에 보내 해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덧붙여 교도소의 거래처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바꿀 수 없다며 임시로 거래처를 개인업체인 경주 영남상회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전 거래처인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위치한 농산물유통공사 영업과 석상철 씨는 "6월 28일 전후로 관리비측부 대장에 계약을 파기하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교도소 측이 이 사건을 처음에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배식하려 든 것이 문제이며 지금까지도 책임자를 확실하게 기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교도소에서는 이번 사건 의

에도 소각장에서 사발면 용기와 요구르트병 등 각종 비닐류를 태워 유해연기가 재소자들의 방에 일상적으로 스며드는 것이 문제되어왔다.

지난 4월 28일 재소자들은 용도과장과 의무과장에게 유해물질 소각장 반입차단을 위한 철저한 분리수거 시행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용도과장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달이 지난 6월달 말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강에 유해한 소각장을 재소자 생활 지역 바깥으로 이전 시켜야 하는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13일 5명의 회원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일부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행사의 동정

- "미국 인권침해 규탄을 위한 거리 캠페인"
 - 7월 4일(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서울)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 전교조 합법화 기념 토론회 '교육개혁과 교원노조의 역할'
 - 7월 5일(월) 오후 4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675-6181)
- 전국빈민연합 개소식
 - 7월 5일(월) 오후 2시/ 종로구 송인 2동 형제빌딩 2층
 - 주최: 전국빈민연합 (02-2232-0684)
-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제3기 평화학교 '남북 긴장과 화해 그리고 평화'
 - 7월 19일(월) 오후 7시 30분/ 명동 전진상 교육관 강당
 - 주최: 빛두레신앙인학교 평화모임 (02-747-2444)

평화와 인권 ⑤ <끝>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미국의 뉴욕타임즈지는 올초 세계 기 이상황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주요 피원조국의 이름과 국제단체의 기부액 수를 도표화하여 게재한 적이 있다. 여기에 오른 국명 중의 하나는 '남한'이었다. 세계경제에서 1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남한이 기아로 원조로 받았을 리가 없으니 이는 분명 '북한'을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이 오기를 제대로 고쳐서 북한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IMF 이후에도 견제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확인하면 그뿐일까. 분명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는 인구의 반쪽이 생과 사를 왔다갔다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나머지 반쪽에선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게 벌어진 일이며, 지원하기 전에 다른 각도에서 의심해 봐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여기에는 분명 잘못 입력된 오류가 있다. 굶어 쓰러지고 있는 적과 대처하면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전쟁의 규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는 평화와 화해가 아닌 전쟁에 사로잡힌 사회로 입력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기아 관련 소식을 접하는 일이 뜸해졌지만,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지난 5년여 동안 진행된 기아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원조단체들의 98년 12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전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 두뇌의 성장이 제일 왕성한 시기에 겪은 심각한 영양실조는 이들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회복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세계식량프로 그램, 유엔아동기금 등의 조사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의 62%가 성장지체를 겪고 있다. 90년대 초의 인구추정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북한에선 9십2만5천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해야 했다. 하지만 그 기간에 북한인구는 오히려 3십2만 명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약 3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며, 이 수치는 6·25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와 맞먹는다. 국제사회는 '북한 사람을 위한 국제금식의 날'을 지정하거나, 북한을 인도나 아프리카 보다도 훨씬 더 식량난이 심각한 세계 최빈국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앞장서려 하지 않는 같은 민족에 대한 의문과 질책이 제기되었었다. 외부의 반응이 시키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유엔은 되풀이하여 북한 구호를 위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으나, 가장 최근의 요청에 대한 부응은 목표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권은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굶주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고립'을 막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반쪽이 절망적인 굶주림에서 회복되고 있지 못한 한반도에선 이런 인권의 가치가 새로 입력돼야 하는게 아닐까.

여성노동자 뭉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

"기계에 손가락이 찢린 여공에게 사업주는 '옷을 갈아입고 와야만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병원에 가면 산재사실이 알려진다 는 이유였지요. 피를 흘리며 옷을 갈아입는 여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이하 여성노조) 출범을 하루 앞두고 충북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윤태영 씨는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그때'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5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계약직·임시직 등에 매여 있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거나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힘든 조건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 지내거나 강제퇴직을 당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지요."

윤 씨의 말과 같이 IMF이후 더욱 열악해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임미령)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대전, 충북 등 9개 지역에 잇따라 지역여성노조가 건설되었고, 전국적인 여성노조의 결성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성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노총 내에서 여성문제가 비중있게 제기될 것이 기대되며, 현재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포함한 여성노조가 합류함으로써 민주노총의 포괄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최하층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여성노조가 설립됨으로써 여성운동의 지평이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이 당면한 문제들이 만만치는 않다. 아직은 초기라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고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처해있다. 여성노조의 관계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싸워야한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당부했다. 여성노조는 오는 3일 오후 5시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

서준식 씨 무죄 선고 촉구 참여연대 등 성명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우리 나라는 인권후진국·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서준식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또한 천주교 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곽동철 신부 등 5인도 서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서부지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6일(화)
제 14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방문시 국제인권옹호연맹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의 메달은 필라델피아협회가 양심의 자유와 빈곤, 억압으로부터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지도자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에게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넬슨만델라(전 남아공 대통령) 등이 포함돼 있다.

4일 자유의 메달을 받은 김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것은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수상소감들은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지난 6월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학살·노동관련 양심수는 278명. 이 통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양심수 양산의 현실을 반영한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김 대통령이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계창 파업유도, 옷 로비 사건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기 보단 외국의 인권상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실장은 "메달을 받을 자격이 대통령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통령이 방미 전에 노동계 수배자와 구속자들에

대한 선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문성현 급속연맹 위원장을 구속했다. 도대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질타했다. 사업장마다 대량 정리해고의 단행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했고 노동관련 수배자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불법 정리해고를 묵인하는 한편 환란의 주범인 재벌들의 부채 탕감에 나섰다. 또한 조계창 파업 공작 같은 노동계 탄압을 주도하기까지 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

게 없다. 철거율은 이전 정부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했고, 농민들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이나 야반도주 등 극단적인 방법마저 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이젠 김대중 정부를 향해 총을 들어야 할 때"라는 표현이 전국민민연합의 양해동 집행위원장에게서 나올 정도다.

한편 김 대통령은 수상소감에서 "수배해제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여러 인권·사회 단체들은 "국제적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약속만은 꼭 이행돼야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런 지적으로 볼 때 김 대통령의 인권상 수상과 인권옹호자 대접은 내막을 모르는 국외에서 만 가능한 일이다.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끊이지 않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민주인사들의 서준식 씨에 대한 무죄선고 요구에 부응한 재판부가 오늘(6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6월 15일 인권운동가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3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각 계의 탄원서·긴급서한·기사·광고 등을 통한 서씨의 무죄선고 촉구가 대규모로 진행돼왔다.

3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명이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에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단체와 해외동포 등이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시드니 존스 씨와 워치 국제인권영화제 부부니 부루스 씨 등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한국 인권상황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 대통령에게 보냈다. 또 재판 하루전인 5일 민족문화작가회의 소속 고은 시인 등 106명의 문인들이 '검찰의 시대 착오적인 서 씨에 대한 구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올바른 역사를 위하여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원하며'란 제목의 탄원서를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거센 서씨의 무죄 촉구 요구에 부응한 재판부는 서씨의 7월 6일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

지난 6월 초순, <인권하루소식>에 배달된 한 통의 우편물에는 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이 등본의 뒷면은 광고지였다. 확인 결과,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면지로 활용해 광고지를 인쇄한 것이었다. 학원 측은 "실수로 이면지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경우 해당 학원생들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학원 측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한 아파트, 우체통마다 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단이 꽂혔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라는 통고를 한 것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며 경악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발급하는 강제적인 신분증 하에서는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상품광고지 발송을 위해서나 범죄대상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거래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복제되고 변형되고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구상을 내놓았다. 지난 96년, 42가지 개인정보를 하나의 집적회로(IC)카드에 입력해, 전국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 즉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만분지 일만 된다 할지라도 정보를 아예 흩어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외국의 일반적인 견해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지극히 '선진적'이며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선전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은 사회각계의 거센 반대와 때맞춰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침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음모는 여전히 활동중이라는 의혹이 이번 주민등록경신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서 풍기는 냄새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의 집중화와 집중된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정보흐름의 대량화를 본질로 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플라스틱 주민증에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산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시키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보공동활용방안을 통해 이를 기업에게까지 공개하려 하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경신사업은 IC 칩만 바뀔 뿐 모든 전산장치들은 전자주민 카드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경계했던 사람들은 그 피해를 지적하면서 '환경과 폐'와 같다는 예를 든 일이 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을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후과를 가져오는 환경과 폐처럼 플라스틱 카드에 쌓여 가는 정보와 관리 체계는 전자주민카드가 물고 울 파장을 회피하기 위한 '훈연용'일 수 있다.

온전한 특검제 요구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

특별검사제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여당에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을 결의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9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일 오후 8시부터 환경운동연합에 모여 '특별검사제도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1백 시간 연속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고급웃 로비사건 이후 특검제 전면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도입에 관한 말만 분분할 뿐 아무런 적극적인 의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아 문제를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존재인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성은 조폐공사 파문과 웃로비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특검제를 적용시킴으로서 검찰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여론을 진정시키려 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중렬 팀장은 "특검제는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정부여당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해주는 특검제 전면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바다 서울 상경

명동성당 농성돌입

에바다 농아원생들과 관계자 30여명이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특담'을 요구하며 5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에바다 관계자들 중 일부는 지난 28일부터 평택역 광장에서 이미 천막 농성을 진행해 왔다.

<본지 6월 30일자 참고>

<오늘 기사 넘침으로 '주간인권 흐름' 내일자에 게재합니다.>

주요공판안내

▶ 7월 7일(수)
박상혁(국보법 찬양·교무) 등 서울고법 형사 4부 403호 오전 10시 선고
이장희(국보법) 서울지법 4단독 524호 오후 5시 속행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7일(수)
제 140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8.15 양심수 사면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 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일이 있다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사면 당시 완화된 준법서약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준법서약제는 지난해 정부가 사상 전향제를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비롯한 시국사범들에게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출소 후 명확한 법 준수 의지 △장래 생활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당수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이 인간 내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라며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해 지난 8·15와 2·25 사면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정부는 예외적으로 지난 2월 25일 우용각 씨를 비롯한 비전향 장기 양심수 19명을 준법서약서 제출 없이 석방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준법서약제 도입 초기부터 '변형된 사상 전향제', '확대·강화된 사상 전향제'라고 비난해왔던 인권단체들도 2·25 사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온전한 준법서약제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마당에 인권을

침해하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인권신장을 위해 양심수를 석방한다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준법서약은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준법서약의 강요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본지 발행인이자 인권운동사랑방 대

표인 서준식 씨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는 6일 갖기로 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 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이 재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제주 4.3 관련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에 대해 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은 9월 중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 씨는 재판 직후 깊은 관심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시하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총기남용으로 인명을 살상한 경찰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지검 이명석 검사는 총기남용으로 고발된 경찰 전원을 '각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1일 결정)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는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총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만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의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원도 총기사용을 제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드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오늘 정오 한남동에 위치한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의 민주화와 대화 정상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가 열린다. 서울 하늘 아래서 울려 퍼질 버마인들의 민주화 촉구 함성에 서울대총학생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외의 20여 개 학생, 청년, 인권 단체가 함께 하고 나섰다.

1962년 오늘, 버마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진압하려는 군사정권이 양군대학의 학생회관을 폭파하여 학생 1백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군사정권이 저지른 참상 중의 하나이며, 버마인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7·7학살이 37주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모든 대학이 폐쇄 되어있고,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억압받고 있는 것이 버마의 현실이다.

그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가 한국에서 준비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한국에 체류중인 버마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불안한 신분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은 '버마 공동체'를 구성하고, 불안한 신분으로 인한 구속,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버마의 현실을 알리는 투쟁을 원했다. 이에 '버마 국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시혜의 차원이 아니다.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정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류는 누구나 정치활동,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사상과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이유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한국의 군사정권과 투쟁하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버마 국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우리는 버마의 현재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민주화와 대화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명령의 항의서한'을 버마 정부에 전달하고, △7월 7일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재판 회부 △정치활동,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보장 및 학생과 정치범 전원 석방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내 자치활동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후 버마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한국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올 9월 9일 세계각지에서 열리는 1988년 8월 8일의 버마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6월 28일 - 7월 5일)

1. 상복에 턱진 인심, 준법서약제는 왜 거론하나
김대중 대통령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 수상(4일), 이후 기자회견에서 8·15 큰 폭 사면 및 국가보안법 폐의사 밝혀, 하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라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여 준법서약제 지속 시사(5일)

2. 오락가락 특검제
여권 전면적 특검제 도입 시사(2일), '한정·전면' 수용론 지속적인 공방, 여야 실시범위 절충 실패, 국회 본회의 못 열려(5일), 19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국민행동', 특검제 전면 도입 요구하며 4박5일 동안의 밤샘농성 들어가(5일)

3. 메아리친 함성,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집단 탄원서 제출(30일),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단체의 항의서한 밀물, 민족문화학자회의 소속 106명 문인 탄원서 제출 등 국내·외 무죄석방 촉구 포리문 한 주,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연기하고 변론재개

4. 내 지문을 가져가봐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각계 인사 151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1일)

5. 합법적으로 외치게 된 '참교육의 함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10년만에 합법화 맞아(1일)

6.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
IMF이후 더욱 열악해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전국적인 여성노조 결성, 최하층 여성노동자의 권익대변 기대(3일)

7. 모든 어린이에게 고유한 생명권이 있다
캠프장 화재로 유치원생 19명 등 23명 숨지는 대형사건 발생(30일)

8. 한숨 들리는 작은학교 살리기
50여개 작은 학교 등교거부 시작(1일), 교육부 주변 여건·여론고려 통폐합을 연기·보류키로 방침 바뀐(1일)

9. 남북 차관급 회담 쟁쟁
'이산가족 우선 논의하자', '비료 먼저 보내라' 거리 못 좁히고 각각 귀국길 올라(3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8일(목)

제 140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교육부 장관님!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없애지 말아 주세요"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의 책임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외쳤다. 이날, 30여개 초등학교에서 온 5백여 명의 학부모와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부가 일을 벌여놓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키거나 추진시기를 조정할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이후 반발이 심한 경기도 지역의 통폐합 대상 학교의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2002년까지 보류하는 조건으로 1백 명 이상의 학생을 유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렇듯 통폐합이 일단 보류되는 했지만 실상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이기에 때문에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은 일단 통폐합에서 제외되기 위한 '치열한 학생 유치작전'으로 일손을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서글픔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다고 집회 참가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해운초등학교 대책위원회 정권구(39)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정책의 일관성 없이 각 지역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반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반발을 서서히 밀려 죽이려는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을 예비 학부모라 밝힌 안상경(40·안성농민회 회원) 씨는 자기 아이가 내년에 입학하게 될 죽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현재 86명인데, 잇따른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지친 교육청 관계자들이 타 학교에서 서류상 위장등록 시켜 1백 명을 채운 후 다시 전학시키는 편법을 귀뜸 해 주는 등 은근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는 노구의 최정만(68·대전 동명 초등학교 대책위원회) 씨는 "대통령 당선 전에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말만 하더니 정작 당선 후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전체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또 참교육학부모연대 소속 한 학부모는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교육재정이 내 아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지는 일을 같은 학부모로서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에서만 아니라 지역별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된 점은 반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유보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선회가 이들에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백지화 뿐이라는 것이다.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뒀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대학생 해직기자들이 출현했다. 7일 인제대, 계명대 등 4개 대학 신문사의 학생기자 9명은 기자회견·신문사폐쇄 천회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참여한 전 계명대 학보사 기자 김현경(중국학과 4년) 씨는 "나를 비롯한 기자들을 해임한 후 신문사를 폐쇄한 학교측이 최근 학보를 학교 홍보지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자를 학교당국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신지 않는다 하여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나 사회문제를 다룬 기사의 검열과 삭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기자회견과 신문사 폐쇄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학교 당국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 단속 좀 잘해라"고 하는 등 기자 일을 그만들 것을 종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대기련은 7일 '김덕중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대학언론탄압의 배후로 교육부를 지목하면서, 교육부가 올 초 각 대학에 하달한 '학생지도대책'이 각 대학의 학생지도 실적을 대학지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한 대학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휠체어추락, 지하철공사 유감

장애인 대책위,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

지난 6월 28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이규식(31, 뇌성마비1급) 씨의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하여 7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지하철공사)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역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가 수동식 휠체어 전용이기 때문에 이 씨가 사용한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역무원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 연맹, 노들 장애인 야학 등이 이 씨 사고에 대한 대책위는 이러한 지하철공사측의 해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두리둥실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이번 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과의 방법으로 일간지 5단 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였다.

또 대책위 관계자는 장애인이 왜 역무원의 안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혜화역에서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 전동휠체어를 탄 노들 야학 학생과 교사가 혜화역 2번 출구 방향에서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역무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역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질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이므로 시혜의 형태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책위는 △현 휠체어 리프트 설치 관련 규정이 정해진 상세한 배경을 밝힐 것 △현 규정이 스쿠터를 탄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규명할 것 △안전하지 않다면 '경고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은데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 등을 지하철공사측에 요구하였다.

농촌을 바꾸자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을 마련하여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또 전농을 주축으로 이 법안의 채택을 촉구하는 농성을 오늘부터 국회가 폐회되는 17일까지 국회 앞에서 벌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그간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해결,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검은색 관위에 현색 국화가 놓여졌다. 이윽고 한 버마인이 동시통역사의 입을 빌려 절규했다.

"인권은 국권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버마의 국회는 몇 년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대하이 폐쇄 당해 20대 청년 중에는 대학졸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마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곤대학의 학생회관을 폭파해 백 명의 학생들을 살상했으며 현재에도 삼천 명 이상의 국민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마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7일 낮 12시, 집시법 거리조항에 묶여 대사관 앞 집회를 포기해야 한 20여명의 버마인들은 버마대사관에서 1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학생 및 인권단체회원 40여명과 함께 '62년 7월 7일 양곤대학 대학살'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꼬리가 유난히 긴 새 한마리가 그려진 머리띠와 완장을 차고 거리로 나선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소속 버마인들은 그 새를 '버마 민주화의 날까지 결코 죽지 않을 상징의 새, 불사조'라 칭하며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불법체류로)언제 본국으로 송환될 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찰을 보면 숨게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버마의 변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몇십년이 흐르더라도..."(모조, 24)

버마 외곽 산을 타고 국경을 넘어 인도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는 불법체류자 데이 영(29) 씨도 "버마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한달 전회비가 30-40만원 이상 들지만 버마에 민주가 없는 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치고 용산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서툰 한국말과 바다 랭귀지를 동원해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버마의 상황을 알리며, '버마 민주화와 대학교육 제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금세 외어버린 얼굴과 땀으로 세탁된 옷들도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한 장 한 장 늘어가는 서명용지 속에서 버마 민주화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 했다.

한편 버마 대사관 측에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최경송(파천시 시의원) 씨 등 집회 참가자 대표들은 버마 대사관 직원들과 인성을 높였다. 버마 대사관의 일등서기관은 대표단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절하는 한편 심지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기자는 요구도 묵살한채 "서류만 빨리 놓고 가라"는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9일(금)

제 140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외침이 미국 땅에서도 울려 퍼졌다.

제미한국청년연합(회장 김희숙)과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회원 5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김대통령의 '자유메달' 수상 장소인 독립기념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외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자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능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인권위원회 견해 수용'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왔다.

제미한국청년연합의 김희숙 회장은 "남북 조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포사회와 타민족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이었던 '박태훈 씨 국

가보안법 위반 사건 제소결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권고를 무시, 국가보안법의 개정작업을 지연하자 재미동포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개최했다.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케 하고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는 숭고한 이상을 존중해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핑계로 독재정권을 보안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악법을 유지하려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태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평했다.

알림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시간 연속행동' 정리집회
일시 : 7월 9일 낮 12시
장소 : 광화문 빌딩 앞

'온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항의 팩스보내기
청와대 대표팩스 02) 770-0202
청와대 민정수석실 02) 770-0622

만화사랑방



이동수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범불교도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 시절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촉구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범불교도 1천8십인 탄원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얼굴에 비친 허탈감은 과거 어느 정권과 별반 다른없는 실망감"이라며 "정권교체이후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은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에 묻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군부독재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석방되는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은 정치수배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가족과 학교를 떠나 차가운 거리와 농성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정치수배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범불교도 탄원서에는 고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인국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민병천 서경대총장 겸 불교마로세우기 고등 등 불교계 원로들이 동참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종교계와 법조계 인사 6백39명도 7일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내고, 수배해제를 위한 대통령의 책임성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대표 장여경)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계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언제든 전자주민카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통신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되었으나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를 비롯해 학력, 직업 등 141개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돼 있으며 이중 78개는 이미 전산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스케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 민가협, 288번째 목요집회

양심수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설레고 있다. 김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받는 자리에서 '올 8·15를 기해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 등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9월 23일 시작된 후 7년째 접어드는 목요집회, 오늘도 어김없이 보랏빛 머리수건을 두른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 양심수 어머니들이 탑골공원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 8일로 2백8십8번째 목요집회를 맞은 이들은 언제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들이 목요집회를 멈출 수 없는 까닭은 손성모(71, 19년째 수감 중), 신광수(71, 15년째 수감 중), 류라진(72, 6년째 수감 중), 안재구(67세, 6년째 수감 중), 최호경(8년째 수감 중) 씨 등을 비롯한 2백7십8명의 양심수들이 아직도 15척 담장 안 독방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9월 10일 민족해방에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호경 씨의 부인 황선희(40) 씨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김대통령의 4일 발언으로 인해 부른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매시간 라디오와 TV를 동시에 듣고 본다는 황 씨는 아들(최민혁, 11세)에게 "이번엔 아빠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저번처럼 못나오면 어떻게 하나"고 반문했다며, "확정되면 이야기 할 걸, 괜히 기대를 가지게 했나 후회하게 된다"고 복잡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금속연맹 백순환 부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구속수배자들을 생각하면 당사자 다음으로 대통령 자신이 가슴아프다.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해 풀어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노동계 수배자들이 대거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다시는 노동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한편 각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며 분노했다. 백씨가 소속된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1일 용산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구속된 상태.

또, 이날 집회에 참석한 홍세화 씨는 "항간에 최후의 망명객이라고 자신을 말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감옥에 양심수가 있는 현실에 몹시 송구스럽고 분노가 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이왕 석방하려면 준법서약서리는 조건을 걸지 말고 깨끗하게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10일(토)
제 140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교육부가 9일 해직 사립교사 등 199명을 전원 복직할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선별 복직의 여지를 남겨 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해직교사 모임의 김영미 해직교사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선별 복직을 위한 기구다. 199명은 동시에 같이 임용되지 않으면 복직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도 성명을 발표, "교육부가 '전

원 복직 방침'을 전면내 내세우면서도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직 관련 기준과 방법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선별복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조건없는 해직교사의 전원복직으로 교육개혁과 참교육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시국사건이나 사회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해직된 교사의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생 등 모두를 8월중으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복직 대상자는 전교조

활동 25명, 시국사건 28명, 사회 민주화 71명을 비롯해 시국사건 또는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75명 등 모두 199명이다. 교육부는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된 시국사건 관련자의 전원 구제 △전교조나 사회민주화 관련자들의 경우 '해직교사복직심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복직 여부를 심사하여 복직 △국립사범대 임용제외자들의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문정현 신부, 무기한 단식농성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문정현(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8일 오후 3시 군산 구 시청 사거리에서 천막을 짓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군산노동자의 집 간사 유기만(27) 씨는 "회사측이 해고자들에게 접근해 돈과 구속을 미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고, 검찰 또한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을 트집잡아 김삼배 기아특수강 대책위 위원장과 김정기 교섭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탄압중지와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문정현 신부님이 대표로 항의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아특수강 해고자들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현,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지지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성명을 내고 △김삼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방침 철회 △기아특수강 측의 회유와 협박 중단 △해고자 전원복직 등을 주장했다.

기아특수강 측은 지난해 9월 103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에 기아특수강 노동자들은 반발하며 기아특수강 앞에서 전원복직을 내걸고 280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이것이 징계 최소화냐

서울지하철노조, 대합실 노숙 투쟁 7일째

"시민들은 지하철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지만 노조원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 바닥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종진(42, 서울지하철 징계자 원상복귀 투쟁위원회 위원장) 씨의 말처럼 지하철 파업 관련 노조원에 대한 광범위한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있었던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김대통령은 "징계를 최소화하라"고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었다. 하지만 공안당국과 지하철 공사측은 구속 24명, 고소·고발 270명, 직위해제 109명, 해고 86명, 중징계 14명(징지 4, 감분 10), 경징계 3,195명 등 감경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징계받은 노조원들은 노숙자 생활을 감수하며 지하철 바닥 농성을 지난 3일부터 하고 있다.

박대길(28, 승무해고자) 씨는 "해고되어 한동안 주변의 걱정이 이어졌죠. 집에서는 부모님을 속이며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출근하는 척 했어요"라며 "냉각장치가 정지되는 밤시간의 썰는 듯한 더위가 괴롭지만 옆에 있는 동료 가 있기에 견딜 만 하다"며 미소지었다. "노상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처음엔 시큰둥했다"는 또 다른 노숙 투쟁자는 "지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묻기도 하고 전단지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진작 시작하지 못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철회와 해고노동자 원상복귀 △조합비가압류(운송손해분담금) 철회와 공사측 손배처리 △단체협상이행 등을 요구하며 12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 학교 통폐합

정부의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에 맞서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전의 동명초등학교를 지난 3일 방문했다. <편집자 주>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할 때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다 나요. 아이들 문제로 이르고 있는 건데 도리어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하고요. 그때마다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노력으로 학교를 지켰다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싸워야한다고..."

총회를 마치고 나온 단비 엄마 박영래 씨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풀이 죽어 있었다.

오늘로 끝이길 바랐다.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입장이 쉽사리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등교까지 거부한 채 '재고'해달라고 하는데, 애들을 보아서라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생님들을 집으로 보내 아이들의 등교를 독촉했다. 또 엄마들이 운영하는 교실에 오는 아이를 강제로 학교에 데리고 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편견을 듣게 하는 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만 남겨줬다.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인 처사 앞에서 학부모 총회에 모인 엄마들은 다시 한번 등교거부를 결정해야했다. 이번에는 방학 전까지로.

대전광역시 동부 추동에 위치한 동명초등학교는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전망 좋은 곳이다. 지금부터 81년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산에서 헤온 나무로 지어진 동명초등학교는 온 마을 사람들의 작품이다. 현재 추동을 중심으로 20km 반경 내에 있는 64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의 주인이다. 하지만 동명초등학교의 '내일'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학교측은 지난 4월 학부모 간담회를 열더니 '학생수가 적으면 사회성이 결

여되고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8월 안으로 이 학교를 화남초등학교에 통합시킨다'고 밝혔다. "시내 학교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좋은데 무슨 소리냐"며 학부모들은 펄쩍 뛰었다. 주민 대부분이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고 대전과 서울 교육청을 오가며 항의 집회도 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학부모들은 '시골 사는 것이 죄'라 가슴을 치며 최후의 선택, '등교 거부'를 결정했다.

"학교에 못 간지 열흘 제예요. 선생님도 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애들이 적어서 우리 학교를 없앤다고 하던데, 너무 싫어요"(정익균, 5학년, 12)

"시내 애들은 우리가 시골에서 왔다고 싫어 할거예요. 그리고 차 타는 것도 싫고요."(정애영, 3학년, 10)

엄마 선생님들과 자연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지는 게 '싫다'고 입을 모은다.

어느새 열흘 제로 접어든 등교거부운동. 엄마 15명이 자원교사가 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을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 첫날은 프로

그램을 만들지 못해 예를 먹다가 결국 학교통폐합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간식으로 먹던 옥수수를 얼른 먹고는 반주에 맞춰 '앞마을에 순이'를 부른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은 30분을 넘기지 못했다. 등교거부를 방해까지 하기로 한 결정이 알려지면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서울에서 이사 온 김윤희(34)씨는 "서울 학교는 경쟁도 심하고 한 반이 50명인데 비해 여기 학교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해왔다"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통합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두 아이의 학부모인 윤상호(목사) 씨도 "시내와 통합되면 아이들은 시골 아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또 거리도 워낙 멀어서 아이들이 차에 시달리게 되고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선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 작은 학교를 없애려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학교 주인들의 학교통폐합 반대 의사는 분명하다. 교육받을 주체를 생각하기 보단 경제논리에 치우쳐 행정부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작은 학교 통폐합은 교육 환경 개선은 커녕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있다.

행사와 동정

- 장애인 시설비리척결과 예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 7월 10일 오후 2시/ 종각역 제일은행 앞(문의 김형수 011-446-4804)
 - 주최: 장애인시설비리척결과 예바다문제해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식
 - 7월 12일 오후 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02)747-2448
- 정보화 시대의 사회복지환경의 전망
 - 7월 12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 주최: 한국기독교협의회 02) 763-7990
-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보고모임
 - 7월 16일 오후 5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 522-7284
 - 주최: 한국 인권단체 협의회
-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제3기 평화학교
 - 7월 19일-29일내 매주 월, 목 오후 7시 30분/ 명동 전진상 교육관 강당
 - 주최: 빛두레 신앙학교 평화모임 02) 747-244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13일(화)

제 14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경찰이 한총련 수배자들을 잡겠다고 수배자 뿐 아니라 이미 구속된 학생의 가족들까지 괴롭히고 있다.

지난 7월 초 채병욱(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씨의 부친, 채 아무개 씨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인이 찍힌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아들의 작년 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8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채 씨의 아들은 이미 구속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장세호(99년 남총련 의장) 씨의 부친 장 아무개 씨도 비슷한 시기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평소 잦은 경찰 출입과 전화에 시달려오던 장 씨는 아들이 수배자란 생각에 별다른 항의도 못했지만 지병을 앓고 있던 노모가 놀라는 일이 계속되자 "노모가 지병을 앓고 있으니 집안 출입을 삼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그런데 출두요구서까지 받게되자 장 씨는 '아들의 일에 왜 부모를 오라 가라하냐'며 경찰에 항의했고, 담당 경찰은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또한 조선대 사회대학생회장 손지영 씨의 부친 손 아무개 씨도 경찰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은 바 있다.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경찰은 손 씨의 여동생들이 생활하는 자취방에 새벽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손지영 씨를 찾거나 옆집 사람들에게 손 씨의 행방을 캐묻고 가기도 했다.

광주동부경찰서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런 경찰의 행위에 대해 광주 전남양심수 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는 논평을 내고 "수배자 및 구속된 양

심수 부모와 가족들까지 협박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경찰의 반 인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의 차별적 변호사도 "이미 구속된 사람을 비롯해 수배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일축했다.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조폐공·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위원장 강승희)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김명희)은 12일 오후 2시 시청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해 공동 총파업을 감행한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아무 변화가 없다"며 △노·정 대화를 통한 산업평화 정착 △국정조사를 통한 조폐공사·서울지하철 파업 유도 진상규명 △파업과 관련한 대량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약속 세 번, 여전한 '에바다'

에바다 농아원생, 서울상경 투쟁

하나 둘씩 '에바다 문제 해결'이라 적힌 붉은 색 머리띠를 묶는다. 붉은 색 머리띠의 우리들은 새로 온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고 달려나가 부둥켜 안는다. 그들의 행동은 어딘가가 다르다. 말은 웅얼거림에 가깝고 한쪽 손엔 목발이 들려있다. 이들은 에바다 투쟁 959일째를 맞아 모인 에바다 농아원생과 대하 장애인 동아리, 장애인 단체 회원 등이다.

10일 오후 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 모인 이들은 1천 일 가까이 외쳐온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에바다 문제 완전 해결'을 또 한번 외친다.

에바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나선 김형수(23, 연세대) 씨는 "에바다 사태는 우리 나라 시설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설문제 해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조리의 벽을 깨기 위해서라도 에바다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권오일(전 에바다 교사) 씨도 "에바다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강제노역, 성폭행 등의 문제가 이미 확인돼 대통령까지 이 문제 해결을 세 번이나 약속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관이 개입된 상황에서 평택 시민의 힘 만으로 부족해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왔다"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려고 차도로 나섰다. 경찰은 이를 저지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5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민들의 항의로 2-3시간 후 모두 풀려났다.

"귀와 입이 열리다"란 뜻의 에바다, 이제 정부의 귀와 입이 에바다를 향해 열려야 할 때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가지 않는다. 동사무소에 나가 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등 6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가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96년부터 추진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보류시켰던 운동이 99년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전면으로 내걸고 다시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일, 사회인사 151인이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발표했고, 2·3차로 계속할 선언자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우선 주민등록제도 및 지문날인에 대한 국민들의 1차적인 반응은 '주민증 자체의 소지와 이용이 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즉, 은행이용·여행·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신분만 확인'하면 그뿐이므로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별 상관없다'는 의식과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단서라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여기서 진전된 태도는 주민증에 대한 정부당국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가령, 수시로 행해지는 불심검문 같은 행태에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이므로 괜찮다, 아무것도 거리질 게 없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주민증, 일련번호, 지문날인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이다. 강제적으로 집중 관리되는 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 그에 대한 감시 의무의 부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에 동참하는 일은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존 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주민증 제도에 대한 거부는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제공 거절, 각종 형태의 차별 및 미소지자에 대한 면박과 모욕,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비범죄자 취급받아 열손가락 지문을 찍고, 물건처럼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정부 컴퓨터에 '나'를 입력해 놓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정부는 우리 개개인을 쫓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누가 이 장치를 해제할 것인가? <끝>

주간인권흐름

(99년 7월 6일-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한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용통성 발휘 등 예측 반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이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자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 또는 임용한다고 밝혀(9일) 전원 복직 방침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도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복직의 기초를 유지하리라는 우려

3. 농민을 살리려면 협동조합 통합하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농업협동조합법안' 마련 국회제출(8일), 6만여 농민 등 여의도에 모여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 가져(9일)

4. 생각은 했지만 돈은 없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급 자문번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초등학교 5백여 학부모, 정부중합청사 앞 시위, 교육부의 통폐합 일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을 재연할 미봉책이라며 '통폐합 전면 백지화' 요구(7일)

6. 두뇌 망치는 교육을 반대한다
전국 대학교수 9백여명 명동성당에 모여 대학 서열화 고착화와 편중지원 등의 병폐를 이유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두뇌한국21' 사업 즉각 철회 요구(8일)

7. 우리는 판매 기계가 아니다
백화점 파견 10만여 관촉사원들, 월차와 생리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일)

8. 인간개발보고서에 비친 한국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지수(HDI) 발표, 한국은 174개국 가운데 30위 차지, 하지만 여성의 진출도를 토대로 한 성별권한 측정 순위에서는 78위(9일)

9. 서울하늘 아래서 외친 버마 민주화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회원 20여명과 17개 국내 시민·인권단체,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의 민주화와 대화 정상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 가져(7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14일(수)
제 141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구 소련 동포 제외

"정부는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 없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 아니다'는 식으로 재외동포를 보고 있다"

13일 오후 7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소장은 "재외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제

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별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외동포법은 그간 미주를 주축으로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대통령 선거시 공약화 함으로써 대두되었고, 김 대통

령이 작년 6월 방미 중 재미동포들과 제다집을 하고 귀국하여 특별 지시함으로써 입안게 되었다.

인권교육의 새 도전 인권단체, 여름 인권캠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인권캠프가 준비되고 있다. 그간 성인인과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인권 캠프는 간간이 진행되어 왔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인권교육 캠프가 마련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 2면으로 기사 이어짐

■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민족이나 종족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고유문화의 향유 등에서 취약한 '소수자'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혈통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특히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모국이 버리다시피 했던 무수한 재외동포를 배출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최근 재외동포법 제정 추진으로 가시화된 정책에서 유념할 점은 재외동포의 배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과 국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나라의 여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 발상 자체가 판관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외국으로 진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부분 그것을 자진한 반면,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의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라는 가치로 재외동포를 구분하고 더 뼈저리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재 동포에 대한 배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별
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사회주(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부장)

농민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IMF이후 더욱 폭등한 농업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거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마저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협동조합은 IMF를 핑계로 18%의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밤낮으로 빚 독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수십 가지 명목을 붙여 많게는 7-8천 만원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 놀이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협동조합 개혁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농민들의 핵심적 요구사안이었다.

현재 협동조합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율성은커녕 정부의 통제아래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방기됐고 신용사업(돈장사)이 중심이 돼 돈을 매개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해오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농정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사업을 분리해 '협동조합은행' 등으로 별도 운영하고, 협동조합은 농산물의 판매와 농자재 등을 싸게 구입하는 사업 등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이러한 개혁 열망을 저버린 채 예전과 별반 다른 것은 '농업인 협동조합 법안(이하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농축인 중앙회를 대통합해 더욱 비대해진 중앙회를 만들려 하고있다. 중앙회의 대통합은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를 더욱 쉽게 만들 뿐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치권여금지(제7조), 농림부 장관의 감독권 강화(제154조), 법률에 의한 중앙회 해산 가능(제129조), 제경부 장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무제한 통제허용 등의

조항은 협동조합의 정부 예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사업도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안은 농민의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개혁적 내용과 독소 조항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등 30여개 사회시민단체들은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를 건설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 1면에서 이어짐

전주 지역의 제1회 청소년 인권캠프 '인권아 놀자'를 마련한 전교조전북도지부 위원장 차상철 교사(삼례공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어른들이 이들을 대상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공동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캠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인권 캠프를 아래와 같이 각각 준비하고 있다.

- △ 제1회 전북 청소년인권캠프
 때: 99년 7월 22-23일
 곳: 김제 수류성당 교육관
 문의: 0652-231-9331
- △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 어린이 '인권아 무럭무럭' 캠프
 때: 99년 8월 9-10일
 곳: 경기도 가평 두밀리 자연학교
- 청소년 '인권과 친구되기' 캠프
 때: 99년 8월 12-14일
 곳: 경기도 가평 두밀리 자연학교
- 대학생 '인권과 친구되기' 캠프
 때: 99년 7월 27-29일
 곳: 서울대학교
 문의: 02-741-5363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운동본부,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

지난 1일 151인의 사회인사가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한데 이어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를 위한 행동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문날인에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하는 한편,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거나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해야한다. 공개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하려는 사람은 각 통신문에 마련된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에 서명을 하거나 이 름과 연락처, 주소, 선언내용 등을 기재한 선언서를 운동본부에 보내면 된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게돼 새 주민증이 사용되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겠지만 대체할 만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경신 거부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 주민등록법은 만 17세가 된 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거부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운동본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 지문날인 거부선언 통신 게시판
 참세상: go 지문거부
 나무누리: go acro
 천리안: go forum
 하이텔: go newconf
 홈페이지: http://fprint.jinbo.net.
 문의: 02-778-4001, 홍석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15일(목)

제 141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99년 5월 현재 전체 여성노동자의 70.5%가 임시일용고로 여성 노동자 세명 중 두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협회(대표 이철순, 여노)와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대표 최상림)는 14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현황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 5월 진행된 미조직 여성노동자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문헌연구와 설문·면접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중소기업의 미조직 사업장 여성노동자 1천6백92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노의 박진영 조사부장은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이하의 미조직 사업장에서 50여 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90%는 의료,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출산, 육아 등 여성 관련 휴가를 받는 사람도 10%선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노조 미가입 여성 노동자와 가입 여성

간의 격차가 임금, 사회보험, 휴가 유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노조 가입여성의 임금은 평균 69만원 선이지만 미가입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64만원 선이다. 노조 가입여성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돼있는 반면 미가입 여성노동자는 30%선이다. 또 가입여성의 50.8%가 육아휴무를 갖는데 비해 미가입 여성노동자의 육아휴무는 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 미가입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확인시켰다.

이에 홍수경 평등의 전화 자문위원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71%가 미조직 사업장에 근무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지역별·산업별 노조의 결성, 정부의 4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노동법의 엄격 준수 등을 통한 고용·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감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강 씨에게 접근해 프락치 활동을 감요하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는데 이 사실은 지난 6월 강 씨의 양심선언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 인터뷰 ●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중인 문정현(익산 작은 자매의 집) 신부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문 신부는 인터뷰를 한 지 두 시간만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기아특수강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기아특수강측은 103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무원칙 해고, 노조간부 선별해고, 사 측의 구제노력 부재 등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3백일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모두 7명의 해고자가 업무방해로 구속됐으며, 현재 김상배 기아특수강 대책위 위원장과 김정기 교섭위원에 대한 구속방향이 내려졌다. 회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고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단식을 하게된 계기는 무엇인가?

매주 금요일마다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한미행협개선, 미군범죄 근절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기아특수강 해고자 등 군산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에 김·경철은 해고자들을 협박해 집회참여를 무산시키려했다. 그러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기아특수강 문제와 결부해 해고자들에 대한 구속방향을 내렸다. 이것은 분명한 공안탄압이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은

9일 전북지역의 시민단체는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2일 비대위 대표 등 3백 여명은 구속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군산 검찰청을 향의 방문했고, 13일부터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하지만 검찰과 회사의 구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특
집
기획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능 뿐

"시설 문제가 심각할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시설운영자들과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뿌렌나에육원 사건을 접했던 정성환(아산 YMCA 간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린다.

작년 한해, 육지 위의 노예선이라 불린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와 함께 이곳 저곳에서 원생 혹은 사회복지사들의 제보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실상이 알려지는 일이 잦았다. 정 씨의 말처럼 국민들은 몸서리 치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설의 이름만 달랐지 사안과 대응방식은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뿌렌나, 동암, 에바다...

"대통령 아저씨,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덕이 있는 원장과 이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어린 이 헌장'에 나오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뿌렌나에육원에서 보육사로 근무하던 이순아(30) 씨는 지난해 9월 시설 내 아동 학대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간 수없이 아산시청에 실태를 알리고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씨의 청와대 탄원서에 자극 받았는지 아산시는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김창선 이사장과 차동춘 원장이 시설 건물의 임대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뿌렌나에육원은 관선이사장의 파견, 시청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일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비를 고발한 이 씨 등 보육사들은 시설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됐다.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 성폭행 의혹 등 대표적인 문제들은 무혐의 처리돼 김 씨 등은

수익금 횡령부분으로만 기소된 상태이다. 이들은 관선이사장의 임기만 끝나면 언제든 다시 시설로 복귀할 수 있다. 시설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줬던 아산시 공무원들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제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은 양규복 이사장은 부인 박순자 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편법증원 등을 통한 정부 보조금 횡령, 원생들에 대한 성폭행 및 상습구타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다. 이 사실은 한 원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시민단체도 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성폭행 가해자가 구속되고 원장이 바뀌었다. 하지만 동암에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며 동암의 비리를 폭로한 원생 김경택(34, 뇌성마비 1급 장애) 씨에 따르면, 양 씨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이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폭언은 여전하고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도 아직 동암에 남아 있다. 오히려 동암 원생들은 이전보다 더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김 씨는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한다.

비리 드러나도 처벌은 시능

시설비리척결과 최성창 전이사장 일가의 완전퇴진을 요구하며 천 일에 가까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에바다 농아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에바다 농아원들은 지난 96년 시설 내비리척결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검찰수사와 행정기관의 감사로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인건비 이중수령,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최 전 이사장과 최실자 전 원장 등이 구속됐다. 대동

령이 문제해결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관선이사으로 파견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구속됐던 재단 운영자들이 재단운영에 복귀하면서 문제는 이어졌다. 최 전이사장의 동생 최성호가 에바다 농아원 교장으로 취임했고, 최 전원장 등은 에바다 내부운영에 깊숙이 관여, 공금 등을 착복해오고 있다. 비리사실을 폭로해 파면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복직명령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최 전이사장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발견돼 에바다 문제 해결이 시능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이일수 씨는 이면합의서에 대해 "관선이사 파견으로 에바다가 정상 운영된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에겐 운영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 에바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에바다 농아원생들은 아직도 평택역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폭로의 끝은 제자리

여기서 하나같이 발견되는 현상은 정부의 역할과 의무의 부재이다. 강제노역과 임금횡령, 원생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횡령 등 그 정도를 넘어서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은 정부의 감사와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폭로된 이후에도 정부의 싸고돌기와 해결의 시능은 계속되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주범들은 언제든 시설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왕국에 복귀할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임과 책임회피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유로 시설 문제의 폭로는 문제해결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확인시켜 주는 데 머물러 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17일(토)

제 141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된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하자 김 아무개 검사는 고발인으로 명시된 13개 단체 대표들의 인감증명 첨부를 요구했다. 이에 고 씨는 "무수히 많은 고발장을 접수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신문도 못 보았나? 이번에 새로 규정이 생겼다"라며 고 씨의 고발장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하는 수 없이 고발장을 돌려 받은 고씨는 이어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다.

또다시 김 검사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감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고소장의 접수 거부 이유였다. 감 씨 등은 "변호사가 혐의사실에 따른 위반 법 조항까지 명시해 작성한 소장"이라며 항의했지만 김 검사는 "혐의사실의 기술방식이 틀렸다"며 소장의 제작성을 요구했다.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검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서류작성을 요구한다면 누가 도대체 소장을 접수 할 수 있겠느냐. 김 검사의 마음에 들 때까지 소장을 고치라는 소리냐"라며 고 씨 등이 부담함을 지적했지만 김 검사는 "검찰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감 씨와 고 씨는 법원에까지 간 상태에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감 씨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작성한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소장 접수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소장의 접수 거부는 이해

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광희 변호사는 "고소, 고발장의 경우 사실관계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검사의 논리에 기초한다면 일반인들의 경우 고소, 고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검사의 행위를 질타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236조는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 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소장 접수 거부 행위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정원장 고소, 고발전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카드 거부 확산

청년진보당, 전국 서명운동

16일부터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주민카드에 반대하는 전국동시다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년진보당 정책기획국 전형재(32) 씨는 "과거 꾸준히 진행되어온 지문날인이 전산화해 통합관리 되면 국가권력의 필요와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이다. 권력에 의해 남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주민카드 경신사업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수순 밭기"라며 "주민카드가 개인에 대한 통제책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진보당 당원들은 16일 서울 명동 대한중금 앞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주민카드를 반대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이후 23일 전주 코야 백화점 앞, 31일 목포 목포역 앞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행사와 동정

- 시설 의문사 장애인 합동 위령제 및 장애인시설비리척결과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 7월 19일(월) 오후 2시/ 대하로 마로니에 공원(문의 011-446-4804)
 - 주최: 장애인시설비리척결과 에바다문제 해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 한국대학인론의 현실과 전망(토론회)
 - 7월 19일(월) 오후 2~6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문의 714-4562)
 - 주최: (사)민주인론운동시민연합/전국인론노동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해외 퍼블릭리액세스프로그램 시사회
 - 7월 20일(화) ~ 21(수)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주최: 한국방송진흥원/인론개혁신민연대(문의 3219-5439)

특집 기획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매년 서너 차례 세상에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사라진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정부기관은 당장 문제점을 시정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떠난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옛일이 되고 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건들의 운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건이 크게 폭로되었으면 당연히 뭐가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예바다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순간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렀던 시설 관계자들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받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감옥인구보다 많은 시설생활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7백43곳에 이르고, 이들 시설에는 약 7만3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우리 나라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원이 5만 9천명이고, 정원이 초과될 때는 수용인원이 7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설 수용인원은 교도소 인구와 맞먹으며, 비인가시설의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보다 3배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인구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어쩌면 범죄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입퇴소 심사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중 우선 지적되는 것은 '입퇴소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까다로운 입퇴소 절차가 각기 규정되어 있다지만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이다. 입퇴

소 심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구성된다. 이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시설과의 유착이 매년 발견된다. 수용 인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입소 인원을 늘리고, 퇴소를 못 하도록 막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시·감독 의무의 방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사슬이 질기다 질긴 동아줄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중앙과 각종 끈으로 연결된 토호세력이라는 권력집단과의 유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만든다.

엄청난 인권유린과 비리가 확인된 예바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설비리와 유착된 권력이 자신의 발목을 자르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런 권력의 비호 아래서 시설장들은 시설 안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각종 지원금과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시설장의 사금고가 살찌게 된다. 이에 반비례하여 수용자들은 저질의 식사와 의류 등을 공급받고, 폭행, 강간, 강제노역에 심지어는 살인과 암매장 등의 인권유린에 방치되고 만다.

이런 문제들이 폭로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본질적인 문제는 덮고, 주변만 뱅뱅 돌다가 그치고 만다. 양지마를 사건에서 살인, 성폭행, 암매장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차 돼지 않았다. 예바다 사건에서 농아원생들의 의문사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이런 허술한 수사를

통해 기소가 된 시설장 등은 쉽게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게 된다.

무엇을 해야 하나

이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입모아 촉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책임의 강화'이다. 수용시설은 신체구금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기구가 이를 철저히 관장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시설은 제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시설장 중심의 관련 법규들을 수용원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설 생활자의 재활과 사회복지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다. 비리 시설의 공통점은 즉벌체제에 의한 폐쇄성이다. 이사회와 직원이 이사장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공익노조 건설을 꾀장해야 한다.

이런 대안들은 시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고질적인데 해결노력은 빛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결코 환영받는 사업이 아닌 듯 보인다.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 고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갖는 인식, 즉 부랑인이나 장애인 등을 사회복지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것이 좋다는 방어의식에 기생하고 있다.

'내 눈앞에 안 보이는게 가장 좋다'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수난은 사회적 관심의 햇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0일(화)
제 14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새 국면 맞은 예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예바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7월 초 서울지법은 최성호 전 대표이사가 낸 이성재 신임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신임이사 효력정지 처분에 의해 활동이 금지됐던 이성재 의원을 비롯한 예바다 신임 이사진은 지난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법원의 판결에 예바다 농아원생과 관계자들은 예바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반가워했다. 농성참가로 직위해제 되었던 전 예바다 농아원 교사 김정임 씨는 "이성재 의원의 신임이사장 취임은 예바다의 변화를 예고할 것"이라며 "이성재 의원이 2000년 3월까지의 임기동안 예바다에 남아 있는 비리연루직원을 파면하는 한편, 복지시켜야 할 교사는 복지시키고, 예바다 농아원생들의 거취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바다 농아원생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소 조치된 예바다 학생 20여명은 평택시에 마련된 해아래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최 전 대표이사 등에 의해 파면된 권오일 씨 등을 비롯한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으로 부터 복지관결을 받았으나 최 전 대표이사와 남규호 전 관선이사장은 이의 수용을 거부해왔다.

예바다 사태는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 60여명이 원생에 대한 강제노역과 성폭행, 정부 보조금 횡령 등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검찰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 전 대표이사, 최실자 전 원장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전 대

표이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이사진이 개편되고 당시 평택시 사회복지과장 남규호 씨가 관선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그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성재 의원을 관선이사장으로 한 이사진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예바다 사태 해결의 조짐은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관선이사 임기종료이후 최 전 이사장을 이사로 취임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이들은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 들여 지난 5월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의 효력을 정지시켰었다.

한편 시설비리최결과 예바다 문제 완전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은 19일 오후 2시 대하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설 의문사 장애인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예바다 농아원생, 대학생 등을 비롯한 2백 여명이 참가하여 예바다 농아원에서 최 전 이사장의 폭행과 구타로 인해 사망, 실종된 오미숙(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 씨 등의 넋을 위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발생해 한때 5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모두 풀려났다.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최근 언론에 의해 경찰청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17세이상의 전국민에 대한 지문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1천1백7십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화했으며 오는 2001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를 열고 강제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일의 1백5십1인 선언에 이은 이번 2차 선언에는 총 1천4백5십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금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대학생캠프: 99년 7월 27-29일/서울대학교/40명/2만원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서강대 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경찰이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하면서 주위의 다른 학생까지 무차별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잠실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남측 결승전과 동일한마당 관람을 마친 서강대 학생 20여명은 지하철 2호선 신촌 역을 빠져 나와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때 학생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30여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고 모두 6명이 강제 연행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서강대 반대현(사학과 99), 장원윤(23, 철학96), 김형찬(25, 경제학96), 김지연(22, 불문과97) 씨 등 4명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팔다리를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 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임오윤(법학96,) 씨 등 2명도 같은 날 정문 앞에서 오후 9시 40분 경 마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수배자가 아닌 반 씨 등 4명의 연행된 학생들이 풀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입술이 터지고 부어 상처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반 씨 만을 남겨두고 입씨 등 3명을 18일 새벽 1시 경 집으로 돌려보냈다.

서강대 학생들은 경찰이 폭력을 은폐하고 오히려 무고한 반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며 반발했고 경찰은 반 씨의 진술서를 받은 후 19일 새벽에 풀어주었다.

이같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마포경찰서 보안2계 양천호 경장은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연행 할 리가 있겠느냐" 했다가 "연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또 반 씨의 경우에 대해서 "연행 당일 것발을 들고 있었는데, 깃대를 휘둘러 장영준 경사와 의경 몇 명이 다쳐서 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행당시에 함께 있었던 반 씨의 같은 과 선배 김보현(사학 3학년) 씨는 "깡패 아니냐 신문을 밝혀라"고 말했으나 "불문과 97학년 이지연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반 씨 등을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반 씨는 당시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경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연행된 후 곧바로 풀려난 이 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임오윤(법학96) 씨는 "새내기 1학년 학생을 강제 연행한 관련자를 추궁하고 마포경찰서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30분 경 대전 북부경찰서 보안2계 소속 사복경찰 4명이 대전 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들어와 한총련 대의원인 이 학교 부총학생회장 전향수(물리과 97)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 김은정(96 산업공학과) 씨는 "총학생회실에 들어갔을 때 전씨가 심하게 저항하고 있었고 경찰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하자 한자로 적혀있는 영장을 2-3초 가량만 보여 주고 강제 연행했다"고 전했다.

주간인권흐름

(99년 7월 12일-7월 19일)

1. 무거운 족쇄 풀리려나

김 대통령, 출소 시국사범 1천5백 명 복권시키겠다 밝혀(13일), 민가협, 민주화운동으로 구속수감 뒤 공민권을 제한 받고 있는 사면·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천주교가 국보법 철폐를 위해 교계 연합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서명운동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를 청원하고 8월께 '국보법 철폐 교계지도자 2천인선언' 발표할 계획(12일)

3. '악'소리 나는 빈부국 격차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인간개발보고서', 세계3대 부자 개인자산이 43개 최빈국 국민총생산의 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20%가 전세계 총소득의 80%차지(12일)

4. 경찰 손에 놀아난 국민의 지문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만 17살 이상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컴퓨터에 전산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 주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는 이를 강력 규탄, 강제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에 1천4백5십3명 참여(19일)

5. 양지마을, 빼앗긴 햇살을 돌려달라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1주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한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감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하지만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고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해 결국 우편접수(15일), 한편 인천대와 인천연합에서도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소 아무게 검사가 프락치 강요했다 의혹제기(12일)

7. 작은학교여 영원하라

교육부, '학부모, 주민여론 감인' 경기 46곳, 경남 22곳 등 작은 학교 94곳 통폐합 유보, 예초 1136개교를 올 안에 통폐합할 방침이었으나 주춤, 하지만 언제 다 시 들고 나올지 몰라(15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1일(수)

제 14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사법개혁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분야는 독재권력과 영합해 국민인권의 보장이라는 역할을 방기하는 한편 소수에 의해 독점돼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법분야의 폐해가 국민의 몫으로 넘겨지고, 사회 전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법개혁은 단행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본적 사법개혁의 실행을 위한 여론화와 감시 및 비판,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통한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활동 보장 등의 내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개혁 15대 과제를 설정, 사법개혁위원회의 의제화를 촉구했다.

선정된 15대 과제는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제 및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신설과 인권법 제정, 전체 사법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다.

건국이후 정치·경제 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으로 지적된 사법개혁은 지난 시절 특수계층의 이익과 연관돼 본질적 개혁에 실패했다. 95년 이후 연이은 법조비리 발생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켰고 이에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사법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법무부 주도 하에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그 인적 구성도 이해당사자인 법률가에 한정돼 있어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세기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엠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피에르 사네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 위한 로마협약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노력

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엠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비준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가 자국의 사법권에 효과적인 보충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엠네스티는 최근 미국정부가 집단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 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국제적인 사법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재판소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가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 설치안에 대해 표를 던짐으로써 빛을 보게된 로마협약에는 1년이 된 지금 83개국이 서명했고 3개국이 비준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7개국이 더 비준해야만 한다. 2000년 9월 30일까지 60개국이 비준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협약안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가 수주 내에 비준할 계획이며, 프랑스에서는 비준을 위해 헌법이 수정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되기 위해 서명과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설치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대학생캠프: 99년 7월 27-29일/서울대학교/40명/2만원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임시국회가 끝났다. 하지만 '언제 국회가 열렸던가'하는 물음이 많다. 인사청문회 관련법, 내무고발자 보호법, 특검제,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도 일부 안을 마련했다는 개혁법안들이 여전히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본 지에서는 4회에 걸쳐 그중 인권관련법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권법을 올바르게 제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실의 아픔과 인권 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법은 이와 같은 현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위 인권법안의 철회를 외치며 지난 4월 단식투쟁을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의 호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인권정책은 인권법안 마련과 그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시화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찌감치 안고 있었다. △감사의 대상이 되어 할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중심적인 인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설정된 점 △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된 점 △ 인권위의 조사권이 갖는 심각한 제약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끈질기게 '법인의 위상'을 고집했고, 민간단체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다.

결국, 70여개 민간단체가 결집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는 법무부 인권법안의 철회를 주장하여 관철시키게 된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민간단체는 법

무부를 놀렸다는 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인권법과 국가위원회의 설치가 국제기준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인권보장 기구로 자리잡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선 듯 보이는 정부의 인권법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썩쳐져 떠오를 줄 모르는 상태다.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정부가 민간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흘러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단체가 준비한 인권법안은 아직 공개된 바 없으며,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철회의 된서리를 맞은 인권법안은 여전히 정부 내에서 이런 저런 방향을 모색 중이다.

새로운 책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아름다운 저항」

방현석 지음 · <노동과 세계>기획 / 도서출판 작은책 / 336쪽 / 9천원

노동소설을 주로 써오면서 노동현장의 아픔과 분노, 희망을 담아온 「십년간」, 「내일을 여는 집」의 청년작가 방현석 씨가 「아름다운 저항」을 발표했다. 「방현석과 함께 가는 역사현장」이라는 소제목을 단 「아름다운 저항」은 97년부터 99년까지 민주노총 기관지<노동과 세계>에 연재되었던 글 묶음 집이다.

이 책은 45년부터 97년까지 발생한 노동운동사의 역사적 현장을 46년 대구 9·23총파업으로부터 전태일 열사의 분신(70년), YH 노조 신민당사 농성(79년 8월), 인천 5·3항쟁(86년 5월), 전노협결성(90년 5월), 현대중공업 풀리앗 투쟁(90년 4월), 노동법개정 총파업(96년, 9) 등 총 22편에 나눠 담고있다.

통찰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내걸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온 동일방직노동자들의 역사에 대한 회상은 당시 관련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기술돼 역사의 생생함을 더한다. 또한 책의 마지막에 담긴 「간추린 한국 노동운동사」는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오늘날 노동운동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가 한 발자국씩 진보를 이룰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렀다. 공돌이와 공순이, 그 모멸에 찬 이름을 노동자로 바꾸어 역사 앞에 복원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지날되었던가"라고 말한다. 또한 한 노동운동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노동운동이 겪는 시련은 노동운동의 질과 양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 구입문의: 02-323-5391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경찰관이 신창원 동거녀 전 모(31)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 규정하며, "이번 사태와 얼마 전 발생한 김사의 여자 성주행 등 일련의 성폭력 사건은 여성에 대한 대 사회적 폭력행위로 사회적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 사안에 대해 일시적, 개별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경찰청장의 국민 공식사과 △제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여성인권 유린 금지 등을 위한 경찰관 예방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2일(목)

제 14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감채워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인계된 노숙자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에 거거하며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던 김중부(32), 송수상(30) 씨는 20일 새벽 당산역 근처 모 노래방을 찾았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6명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영등포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자유의 집 관계자들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노숙자 김 씨와 송 씨의 신원보증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정호택(41, 자유의 집 관리실장), 김정호(40, 자유의 집 직원) 씨는 '김씨와 송씨 등 2명이 6명을 상대해 때렸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았다. 이 때 다른 책상에 앉아 있던 형사가 "이리오시요"라고 한 뒤 "당신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며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와 송씨가 대기실 철창을 넘어와 항의하자, 6명의 형사들이 자유의 집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김 씨의 팔을 쥐고 주먹으로 때리는 한편 자유의 집 관계자들을 형사계 사무실에서 내쫓고 문을 닫아 잠겼다. 이 때 밖으로 내몰렸던 정호택 실장은 "2~3분간 김 씨와 송 씨의 비명이 들렸고 다시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김 씨의 양팔이 벌려진 상태로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입에는 수건이 물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씨는 한 손이 수갑이 채워진

채 철창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광경을 함께 목격한 자유의 집 사무장이 항의하자 경찰은 그때서야 이들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또 자유의 집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노숙자 김씨와 송씨가 경찰을 때리지도 않았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찰들이 오히려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형사와 김영환 형사가 진단서(10일)를 끊어 공무집행방해죄로 노숙자를 구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의 집 정호택 실장은 "노숙자 인권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노숙자라는 것을 빌미로 이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며 "노숙자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밤 현재, 김 씨와 송 씨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으며, 이날 오후 8시경 변호사가 접견을 하여 수감자국과 다리에 구둣발로 채인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대학생캠프: 99년 7월 27-29일/서울대학교/40명/2만원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있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팍팍!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장기수감의 아픔과 국가보안법의 무소불위에 대해 고발하고 싶었다"며 "이를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화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는 297명으로 이중 184명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박재동, 박시백 씨 등 24명의 만화가의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만화전은,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시청역, 종로3가역, 신촌역 등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지난 10년 동안 양심수의 자녀들이 부모의 석방을 염원하며 그린 그림도 함께 전시된다.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

작년 부산과 울산지역의 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영화가 제작됐다. 여기에는 구속된 이들의 재판 모습과 가족들의 서울상경투쟁 등 10개월 동안의 투쟁 과정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 역사의 소중한 자료이며 양심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 및 구입문의는 052-234-2288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이뤄야한다"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회 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이러했다.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죽어간 사람만 331명.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 한할 뿐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으나 그 어느 정권에서도 앞서 죽어간 이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민족민주열사의 유가족들은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명예회복 법안)'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 특별법)'의 시안을 작성해 지난해 9월 여야 국회의원 58명과 5만2천8백98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명의로 법안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의 의문사 진상규명 및 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유가족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정되지 못했다.

국민회의와의 지루한 논의 끝에 수정·보완을 거친 '명예회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진상규명 특별법 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보훈처로 이관된 '명예회복 법안'은 주무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의 폐지까지 치닫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을 보상에 중점을 둔 특별법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민족

민주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국가차원의 예우 요구가 한 순간에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유가족들은 '5·18 열사의 경우 광주에 집중돼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 사실상 보상에 원에 머물게 된다'며 "특별법안으로의 전환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의 청원 당시 이 법을 인권법에 포함해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회의 인권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예초 약속과는 다르게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법무부 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등에 철저히 은폐돼 있으나, 법무부가 구상한 인권법안과 인권위 권한으로는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또한 강제수사권과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권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아들들을 죽인 장본인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일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이소선(전태일 열사 모친) 씨의 절규가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국민회의 당사 앞 점거농성, 삭발 시위 등을 벌이며 2백6십여 일 제 명예회복 법안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아직 몇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할지 모른다.

북한 식량위기 계속

WFP 위기 보고서 밝혀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지난 9일 발행한 '위기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토지, 비료,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 받고 있으며 북한 농민들은 곡물보다는 보다 이익을 내는 작물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난 6월의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한의 현 식량사정을 검토한 WFP는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올해의 식량 생산이 필요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FAO, WFP 현지 조사단과 북한 당국자와의 토론에 기초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6월의 감수량은 평균감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농업전문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WFP는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볼 때, 북한이 더 큰 식량 안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장·단기적 조치가 국제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당장의 목구를 충족시키는 긴급 식량 원조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끔 농업 분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표단의 조사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이미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듯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사대상 아동의 62%가 발육부진을, 61%가 심각한 체중미달을 보였다. 이에 식량위기가 만성적일수록 식량원조가 단순한 곡물지원에 머물지 말고 필수아미노산과 지방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과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3일(금)
제 141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꺾어 맞추기 수사 의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행범으로 지목 당해 5년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이 아무개(35)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활동을 펴고 있다.

이용남(62, 백화점 청소원, 경기 광명시 광명1동) 씨는 지난 91년 아들이 생면부지의 여인으로부터 성폭행범으로 지목 당해 옥살이를 하게 되자 구명운동을 시작, 아들이 97년 만기출소한 후에도 구명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91년 9월 애인을 만나려갔던 아들이 약속이 어긋나 돌아오는 길에 어이없게도 두 달 전 발생했던 강도,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만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법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끝까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한 수포와 아들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통상적인 수사기법과는 달리 경찰이 피의자인 아들을 한번도 사건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경찰관을 대역 삼아 현

장검증을 실시한 점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이 씨를 동네에서 보았다'는 주장을 유일한 증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사건에 끼워 맞추었으며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안산 경찰서)은 "구타한 적은 없다. 사실 범인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맞다고 하는데 어찌하겠나"며 가혹행위에 의한 꺾어 맞추기를 부인했다.

이 씨는 청와대 등 당국에 수 백여 통의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지난 5월에는 고법에 제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법은 '제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심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한달 넘게 취재했던 연합뉴스의 공병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씨 부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변호사와 인권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은 무죄다

미 영화인들 향의 서한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영화 위원회 소속 미 영화인들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향의 서한을 보내 인권영화제 개최로 5년 구형을 받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앤드류 버그만 씨 등 18인의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인들은 예술에 대한 고의적인 검열을 민중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강탈하는 행위로 본다"며 "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인권보장 노력뿐 아니라 김 대통령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21일 여야 3당 원내총무가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8월 2일부터 12일간 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웃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한시적·제한적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제직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왜소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검제 본래 취지 왜곡 우려

시민단체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 돈 세탁 금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를 제도로서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야합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전면적인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

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실제로는 특검제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국회,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

또한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2월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3당 통합으로 인하여 결국 폐기되고 만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도 있었다.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사건은 늘 정치적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귀결되는 게 현실이다.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경조

사비 안 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 동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직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까닭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감작스럽게 진행구 전대검 공안부장 등의 '조폐창 파업유도사건' 관련 발언을 수사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독자적인 수사는 특별검사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며, 사건의 성격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독료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지로번호 7618848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오는 8월로 예정된 동티모르의 자치나 독립이냐를 결정할 투표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외신보도와 동티모르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많은 국제단체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동티모르의 구 식민宗主국이었던 포르투갈과 1975년 동티모르를 침공했던 인도네시아 사이에 동티모르의 자치 여부를 결정할 투표를 올 8월에 실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독립을 지지하는 동티모르인과 동티모르내의 유엔사절단(UNAMET)에 대해 민병대를 포함한 군사세력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현지난민에게 전달할 의약품과 쌀을 운반하던 유엔 요원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통합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군과 그 사주를 받은 민병대는 동티모르인에 대한 학살과 가옥에 대한 방화를 계속해왔고, 독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포와 테러의 분위기와 소요 사태를 조성해왔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인의 안전하고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시단을 조직하여 현지에 파견했다. 방콕에 소재한 포퓰아시아에 따르면 이들 감시단은 기본적인 식량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투표를 2주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원래 투표 날짜는 8월 8일이었으나 21일과 22일 사이로 옮겨졌고, 이러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4일(토)

제 141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국립 목포결핵병원은 지난 6월말 경부터 "환자들의 조기퇴원"을 유도해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목포병원 측은 결핵 1기 환자에게는 7개월~9개월로, 2기 환자의 경우에는 1년 6개월~2년으로 입원치료 기간을 상정하고 입원한 지 2년이 된 환자들은 병세와 상관없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목포결핵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가 국비환자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결핵 환자가 절대적인 안정과 균형있는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 쾌적한 환경 등의 생활조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2년이 지나서 퇴원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목숨에 치명적인 악화가 예상 될 수밖에 없다. 조기퇴원 후 집에서 약을 복용하게 하는 방법은 제발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약제 내성으로 병세는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 작년 7월에 목포결핵병원 측으로부터 퇴원조치를 당한 배상훈(38) 씨는 "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3백20여명의 환자 중 50% 정도가 생계가 곤란한 국비환자"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대해 병원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2년 이상 된

환자는 무조건 퇴원조치 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입원기간 단축을 통해 병실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핵 보균자 1인이 20명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통계를 무시한 것이고 악화된 결핵 환자의 경우 사회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30) 사무차장은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환자들이 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환자와 지역시민이 병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환자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 남비적 차원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와 동정

□ 민권공대위 집들이

· 때 : 7월 26일(월) 오후 5시
· 곳 : 신촌 이한열 열사 기념관 민권공대위 사무실(3142-8650)

□ "젊은 세대를 위한 대한 문화의 모색" 문화 포럼

· 때 : 7월 27일(화) 오후 3시 / · 곳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개혁법안처리 공안탄압 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 때 : 7월 28일(수) 오후 1시-5시까지 / · 곳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설명회

· 때 : 7월 29일(수) 오후 2 /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우리교회 강당
· 주최 :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준비위원회
문의 : 02) 708-4981

□ '99 어린이를 위한 방송캠프

· 때 : 8월 5일(목) - 7일(토) / · 곳 : 음악산가족음악캠프장(경기도 포천)
·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00명 / · 참가회비 : 4만원
· 주최 :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714-4562)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운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운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7일 안씨에 대해 "유사시 보안관찰 처분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유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노맹 관련으로 구속되었던 장민성씨 사건 판결 이래로 검찰의 보안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계속 내려왔다.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나라당도 명칭만 달리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다음달 2일부터 제개될 임시 국회에서는 별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청원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고실업시대에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즉 현행 생활보호법이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준다. 생계 이외에도 주거·의료·자녀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빈곤층의 4대 기초생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기까지는 저지 않은 진땀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부와 예산청이었다. 이들은 △ 근로의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

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됐던 지난 번 임시국회 때는 여·야 간의 다툼 끝에 법안 심사 일정이 모두 취소돼 버렸던 것이다. 이에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현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한계 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가족해체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

속히 임시 국회를 정상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은 곧 결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8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경용 신부(연대회의 집행위원장)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 많지만 우리 사회 한계 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최소한의 출발이라 할 것이다. <끝>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일본 오사카,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친선교류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5회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가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한일 양국 장애인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교류대회는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4개 분과에 관한 한일 회의와 시선 견학, 종합 토론, 친선 교류 등의 일정으로 오는 2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이번 국제교류대회 참석을 위해 장애인 35명과 비장애인 17명이 지난 22일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일본에서도 역시 5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간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나 사회 참여 문제 등 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해 다루는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는 지난 96년부터 한국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일본 장애인 전국공동연합에 의해 개최되어 왔다.

양국의 장애인 친선교류를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교류대회는 토론과 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장애인복지실태를 비교, 평가하고 이들 상황에 대한 대책과 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올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IMF 이후 한국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의 노동여건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한일 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대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연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각 나라별 장애인 복지실태의 극심한 차이에 의해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최측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노윤미 씨는 "이제는 일본 등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장애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하는 연대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대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7일(화)

제 142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준법서약서가 따라붙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복권 대상자에게 서약서를 권유해 제출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각 지청에 하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복권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준법서약을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준법서약서 확대 강화

이같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각 검찰 지청들은 복권 대상자 중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무부의 지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검찰 3과의 사면복권 담당자라고 밝힌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그럼 꼭 풀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 있는가? 우리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98년 2월25일 이후인 신정권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제해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러니 쓰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 관계자의

말은 현 정권 출범 이후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과 시국사범들에게 복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는 이전 정권 때의 형 확정자만이 아니라, 현 정권 이후의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들이나 구정권 시절의 형 확정자에게도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준법서약서가 복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해고 노동자 등 양심수들은 복직 투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26) 씨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아 "올 하반기부터 복직투쟁에 들어가려 했으나 준법서약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와 수배자가족협의회(공동대표 유철근, 수가협)는 이번 법무부의 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집회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준법 서약서의 확대 적용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오는 8.15 특사 때 양심수의 전면 석방 등을 위해 7월말부터 8월초까지를 집중활동기간으로 선정, 26일부터 31일까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거리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8.15 사면을 앞두고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양심수, 정치수배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26일 법무부에 양심수 명단과 8.15 사면·복권 관련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31일까지 매일 탑골공원 등지에서 집회를 연다.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각계와 지역을 망라한 전국의 2백70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노동, 농민, 교수, 예술인, 종교인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 수도권, 영남, 호남 등의 지역 단체들이 총결집한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대표 성유보)」는 2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결성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돼 있어 언론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방송개혁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인 만큼 올바른 방송법 제정은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8월 임시 국회 내 방송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 등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제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 금지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KBS, MBC 방송노조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14일째 이어온 파업을 정리했다.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춘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시위를 마치고 최춘마을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들을 막아섰고, 시위대가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곧바로 전철연 양해동(46) 정책위원장 등 66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다 26일 양 씨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 빈민연합(상임의장 양연수)은 26일 경찰 연행과정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 부녀자 성추행, 강제 지문날인, 변호사 접견 차단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5일 청량리역에서 '박순덕 열사(97년 전농동 강제 철거 과정에서 사망) 2주기 추모제'를 마치고 3백여명이 남양주경찰서로 물러가 항의 연좌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이들을 모두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버스에 태워 경기도와 서울 인근에 분산하여 하차시켰다. 연행과정에서 박지웅(서울대 국문과 1년) 씨가 경찰이 휘두르는 곤봉과 주먹, 발길질에 맞고 2대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의 과잉진압이 물의를 빚고 있다.

요즘도 창문 닫고 잔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새벽 4시30분경 잠자던 최춘마을 철거민 이환일(43) 씨 등 9명을 연행,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를 제외한 8명은 36시간 정도 구금한 뒤 풀어줘 철거민들이 반발을 사왔다.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완(35) 위원장은 "구리시는 가수용단지 마련을 위해 철거민들과 대화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앞세워 포크레인으로 때려부수는데만 열심"이라며 비난했다. 전동인(44) 씨도 "용역강제가 창문을 열고 대문을 박차는 일은 비밀비재하고 돌을 던져 안방유리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심지어 남양주 경찰서 유영주 정보과장이 용역직원들과 돌맹이를 철거민들에게 던지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최춘마을 철거민들은 무더운 요즘에도 용역강제와 폭력경찰의 난입을 적정해 창문을 닫고 자고, 밥집을 설치하려는 상태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철거지역으로 지정된 두 인창동 철거민 20여 세대는 '최춘마을철거민대책위원회'를 올 2월에 구성해 구리시청, 남양주경찰서, 현대건설(철거용역-현대빌드) 등을 상대로 방어벽고 골리앗(망루)에 의지해 힘겨운 철거반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주간인권흐름

(99년 7월 20일-7월 26일)

1. 성폭행 누가 했지
경찰관, 잡북근무 중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 검찰, 독자수사로 특검계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검찰의 독자수사 중단 촉구(20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강희복 전 조폐창 사장이 자주 만났으며 진 씨의 지시로 강 씨가 대책보고서를 여러번 고쳤고, 검찰이 파업 이전에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 등 확인(25일)

3. 노숙자에게 인권도 없다
노숙자들이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 때문에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기피당하고 있어(22일), 영등포 경찰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인계된 노숙자를 철창에 수감을 채운채 폭행(21일)

4. 회사 눈높이에 맞춰라
학습지 전문회사 대교,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9명 징계(24일), 동국합성, 집단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해 매년 10명의 환자가 발생(27일)

5. '간첩' 출소자에 첫 보안관찰 처분 취소
서울지법, 진학준비 중이기에 재범우려 없다며 간첩 사건출소자 안유정 씨에 대한 보안관찰 취소판결(23일), 미국 과학아카데미 등 미 학술단체 인권위원회 김 대통령에 세계적 수학자 안재구 씨 석방 촉구(23일)

6.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정부가 전국 그린벨트의 30%이상을 해제한다는 내용 발표에 반발해 환경단체 농성 돌입, 신경림 시인 등 가계인사 백명 그린벨트 해제 무효화 촉구 서한, 그린벨트 해제 무효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착수(26일)

7. 아이들을 전장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세계 60개 나라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18살 미만 미성년 군인들을 30만명 정도 보유, 12년간 미성년 군인 2백만명 전사 보도(25일)

8. 정부가 나서서 바꾸겠다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 8월까지 최저 임금 시간당 1천6백원 적용(21일), 기획예산처, 공공시설의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을 위해 내년 예산 64억 책정(23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8일(수)

제 142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퇴직이나 직권면직이나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국세청의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이 직원들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국세청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은 교환직원으로 현재 2백2십 여명의 직원을 14명으로 축소하게 된다. 축소방침에 따라 각 지청은 교환직원들에 대한 조기퇴직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조기퇴직 인원이 축소 인원에 미달할 경우 초과인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오는 31일 내릴 계획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방침은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적용으로 인권침해의 시비를 낳고 있다.

영주 세무소의 우희정 씨는 "구조조정인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 건 올 5월경으로 어느 누구도 생계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퇴직과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왕인순 사무국장도 "정부가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 과정 도출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상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조기퇴직 강요도 상식을 넘고 있다. 남편 제사를 앞두고 연가를 신청한 서대구 세무소의 정정자 교환원은 행정계장으로부터 "연가를 내려면 사표를 내고 가라. 조기퇴직에 응하지 않으면서 할 짓은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영덕 세무소의 남옥희 교환원은 "세무소 직원이 밤 11시경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나의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갔으며 이일로 인해 주민들이 내가 사고를 치고 회사

이 직장을 잃게된다.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기능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번 일은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퇴직 강요에 대해서는 "자신(교환원)이 절박한 상태에 처한 것이어서 내용이 과장된 것이지만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는 '공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힘없는 여성 교환원들은 31일 모두 직장을 잃을 운명이다.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 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송·시감 건 등에 대해 위자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장 씨는 보안과장과의 면담 중 폭언을 계속하며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보안과장은 장 씨의 소란, 난동 폭행 및 자해를 우려해 장 씨를 시송·시감한 후 보호실에 대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송·시감, 보호실 수용 등은 행형법 등에 의거해 위법하지 않고 또한 장 씨가 청원권 보고전을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원권이 철회됐

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보안과장과 면담하던 중 보안과장에 의해 강제 시송·시감 당한 후 조사실에 감금됐다. 이후 장 씨는 시송·시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원 보고전을 제출했다. 하지만 보안과장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보고전을 상부에 올리지 않고 은폐시켰다. 따라서 장 씨는 법원에 보안과장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보안과장의 청원권 묵살 혐의를 인정, '국가가 장 씨에게 2백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배상심의위원회에 결정에 장 씨는 제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평등의 전화에 상당한 여성의 3/4(2백 31건)이상이 성적 차별을 통한 부당하고, 차별하고 등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회(한여노협)는 '여성노동 전문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2/4분기(4월-6월)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사업장에서의 여성차별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여노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은 지난 연초부터 3월까지(1/4분기) 1.2%(3건)에서 2/4분기엔 8.0%(24건)로 무려 7%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의 증가는 최근 임금과 승진체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나 승진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임금 격차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학력별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남녀 동일하게 승진해오던 체계를 호봉제에 따라 승진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남성의 균형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호봉수에서 시작하게 돼 여성들의 승진이 어렵게 됐다.

정리해고나 부당노동행위도 3백33건 중 45건에 달하는 14.9%를 기록해 지난 분기보다 약 0.6%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법적·변칙적인 계약적 전환과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한 임금체불, 임금인하, 승진누락, 차별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약적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직장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임신출산에 관한 모성보호,

직업병 등에 관한 상담전화도 지난 1/4분기 때보다 늘어났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1/4분기 시 6.5%인 16건에서 7.3%인 22건으로 증가해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22개 사업장(20인 미만 사업장) 모두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절실한 형편이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은 총 3백 33건의 상담건수 중 50.3%(1백52건)에 달했다. 이는 1/4분기(총 2백45건)의 61.1%(1백51건)보다 약 11%정도가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여성의 직장생활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27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 소속 2백5십 여명은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철저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고근예)

이러한 주장은 의료보험통합 시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가 20%이상 인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적용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시 보다 많은 취약층에게 사회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한국노총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통합 시 발생하는 기존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연금 혜택 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개혁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과 그에 따른 조세부과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여당에△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분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 △예정된 의료보험통합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을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평화행진에 곤봉 든 경찰

최춘마을 경찰폭력에 항의성명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최춘마을 철거민들을 강제 연행 한 것 대한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 "남양주 경찰서가 24일 최춘마을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며 "경찰은 나아가 부상자를 구타하는 한편 의사진료 및 변호사 접견을 차단하고 부녀자와 여학생 등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평화행진 보장이 라는 약속을 어기고 방패와 곤봉을 앞세워 66명의 집회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대중의 호소를 폭력으로 짓누르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29일(목)

제 142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교육부 등이 발행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가 불건전한 성문화, 에이즈의 원인 등으로 기술돼 있어 동성애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남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2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동성애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 내용에 대한 수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교과서들은 동성애자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청소년들에게 내재화시켜 각종 혐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수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교육부가 98년에 개정해 발행한 <국민윤리>와 <교련>,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성과 행복> 등으로, 교련 교과서는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해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윤리 교과서에는 '에이즈, 동성연애, 성폭행 등이 늘어나면서 성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동성애와 에이즈는 무관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성립된 정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도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과서에 수록한 동성애에 대한 기술은 성적 차별에 대한 편향적이고 비하적인 기술로 지적된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나라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이며 유럽공동체 역시 소수자들의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과 희망을 동시에

북녘 어린이 돕기 대장정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과 기초 의약품 등을 지원해 희망을 나누기 위한 국토 대장정이 오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남정민(21)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립대학생의 제안으로 준비된 이번 대장정에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남북어린이에게동무가 후원한다. 남 씨 등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도 문산 임진각 자유의 다리까지 총 404km를 횡단하

며 북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북녘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1천 8백명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영양실태 조사를 벌인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78%가 영양실조 상태다. 또한 남한의 6개월 이상 7살 미만의 어린이와 신체발달 상태를 비교했을 때 키는 10cm, 몸무게는 15kg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외의 지원과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참가신청 및 성금접수 02-743-7942)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조폐창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조조과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성명을 통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주도해 잘못된 구조조정을 일삼은 김 전 법무장관은 그 죄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고 밝히고, 의혹사업장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고근예)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28일 노조관계자, 대학생, 사회단체 인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공청회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주요 민생·개혁법안으로 △부패방지법 및 고위직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인권기구법 △특별검사제 도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법 △택시 삼진아웃제 등이 거론됐다. 또한 자연자 소득과 약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소득과약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기관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가인권기구 예산에 대해 법무부를 경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 진행될 때 예산을 핑계로 일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협 손종필 사무국장은 “왜곡되어지고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밝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폭압기구의 악행을 알려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유공자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다른 단계(전쟁참전용사)와의 형평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특별검사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 로비사건에 한정해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제도로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 공안부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을 했을 것을 밝힐 수 있는가 중요하다”며, “국회입법 과정에 포괄적 규정을 넣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특별검사제 해박야 소송 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지적했다.

< 독자투고 >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나

지난 7월 6일 오후 5시경 저는 모자란 일손을 돕기 위해 전남 순천 고향집에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낚선 사람들이 탄 코란도가 들어왔고 3명이 내려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와서 “여기가 대익(동생)이 집인가요?”라며 물었고 저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익이의 집인가만 확인하다가 제차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순천경찰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들에게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해 반말로 “너가 대익이지?”, “주민등록증 좀 보자” 제가 대익이의 형임을 밝혔으나 거듭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서로의 신분증을 교환해, 저는 그들이 순천경찰서 형사임을 비로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신분증을 돌려받고 영장이 없으면 집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공무로 왔는데 영장은 무슨 영장이나?” “이 자식 호루자식이네”, “싸가지 없는 자식” 등의 욕설로 일관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 동네 어른들이 옆에 있어 저는 치욕감을 참으며 말투 등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욕설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순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신분을 다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놀라신 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있던 면허증을 집어 형사들에게 주었는데 한 형사가 다른 형사에게 “저어놔”라고 하니 다른 형사가 필기구를 준비해 이름을 적으려 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손을 뻗어 형사에 손에 있는 신분증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팔을 비틀었으며 “지금 너 공무집행행해 하고 있어”라는 등의 말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나서야 신분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무소불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집을 드나들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직장에 찾아와 가족전체에게 심신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마저 느껴야했고, 이로 인해 평소 지병이던 간염이 악화되었으며 평소 안하시던 약 주까지 하시는 등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경찰은 학생들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인권을 제쳐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찰들에 의해 우리 가정은 심각한 고통에 처해있고 동생과 가족과의 관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재료공학과 4학년 조관익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30일(금)

제 142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 아무개(26) 씨는 “어머니께서 호적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했다. 어머니가 우리딸은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 동사무소에서는 동의도 없이 내 주민증에 있는 지문을 스캔하고는 사진만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흥 아무개 씨도 PC 통신을 통해 ‘동사무소에 나오라는 연락을 몇번 무시했더니 동장 아저씨가 주인아주머니를 통해 ‘토요일까지(경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 하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정 아무개 씨는

“아파트 계단에 주민증 미경신자의 명단이 게시된 것은 물론이고 매일 밤마다 (명단을) 방송까지 하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정부개입 의혹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는 “주민증 경신은 개인의 자유임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증 경신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증 경신강요 작업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정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국민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직적인 주민증 경신작업 종용을 부인하고 있다. 주민증 경신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 주민과의 최충호 씨는 “주민증 경신을 위해 안내문 발송이나 가정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신작업에 대한 홍보일 뿐 주민증 경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행자부는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법률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다.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 법률상담소)에 가서 상담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법률구조신청서를 법률구조사업회에 제출하면 된다. 돈이 전혀 없는 사람도 법률구조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02-3476-6515)

만화사랑방



이동수

잘못된 교과서가 생명을 앗아갑니다...

평화를 위한 연대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

올 8월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적 차원의 평화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평화주의자들이 모인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는 29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국제대회)' 설명회를 열었다. 민족회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각국의 민간 평화운동단체들이 모여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대회는 8월 12일(목)일부터 3일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성가수녀원 회의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M2000 한국민간단체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대회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5월13일 열린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였다. 아시아-유럽 대안안보회의 참가자들은 캠페인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평화 통일 행사를 마련해 아셈 관련 단체들과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해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연대와 아셈2000에 평화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제대회의 목적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운동이 국제적인 과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의 성과를 계승, 새로운 평화운동의 이슈를 개발하고, 국제 평화단체들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슬로건도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세계로, 평화가 곧 인권이다"로 정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요구 시위를 비롯해 1, 2차 학술토론, 세계평화를 위한 작은마당, ASEM 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샵, 평화를 위한 특별성명 발표 등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는 대인지뢰 대책협의회 등 14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외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 TNI 등 11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교도소내 양심수들이 전국적 연 양심수 연대 기구를 만들었다.

29일 오후 5시 홍익대에서는 재야단

<대학생 인권캠프 현장을 찾아서>

내 것이 된 '인권과 친구하기'

"처음으로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스스로 만드는 캠프였어요."

광운대 1학년인 남희정(20)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한 1회 대학생 인권캠프에 참가했다. "평소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배울 기회는 없었다"는 남 씨는 "모호하기만 하던 인권이 내 것이 되었다"며 캠프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2박3일간 열린 이 캠프에는 대학생 4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5개의 조로 나뉘어 모둠을 이루었다.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은 모듬 이름은 무지개, 비빔밥, 7개의 손가락, 인권과 함께 사라지다, 나 사람 등으로 다채로웠다. 모듬 '인권과 함께 사라지다'는 모듬 이름에 대해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는 인권이 억압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캠프에서는 인권의 기초개념부터 대학생의 인권실천활동에 이르기까지 강의 의식 교육이 아닌 게임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7개의 주제 마당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중에서 '차별 받는 우리 이웃'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권리의 선물을 선사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준다. 또,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방식'으로부터 배운다는 프로그램은 그들의 활동을 직접 역할극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는 무엇에 불복종할 것인가'는 대학생인 자신이 주위에서 느끼는 억압적인 인권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캠프를 준비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의 배경내(28) 상임활동가는 "2박3일 동안 인권이란 주제로 이처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웠다"면서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참여자들이 해방과 자치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이후 다양한 참여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캠프는 각각 오는 8월 9,10일(1박 2일), 12에서 14일까지(2박3일) 경기도 가평 두밀리 자연학교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전화 741-5363으로 하면 되고, 각 캠프 참가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체 인사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육중투쟁위원회 준비위(공동대표 단병호, 한옥투위) 발족식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감옥에 있는 많은 양심수들이 옥중투위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며 "노동, 농민, 학생 등이 주축이 된 한옥투위는 당연한 악법철폐를 비롯해 교도소내 일반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옥투위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준법서약 의무조항)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공안관련 사범 누진 처우 제외 처우지침) △법부부 훈령 396호(준법서약에 관련한 공안 처우 요감)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벌어나갈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7월 31일(토)
제 142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용산 미 8군 영내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던 두라코포레이션 노동자 10명이 29일 오후 6시경 미 헌병대에 의해 연행됐다.

두라코포레이션(사장 장성수)은 미 8군내 건물을 보수하는 용역관리업체로 사 측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고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노동자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사업장이 위치한 미군 영내 잔디밭에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이진희(서울지역 사무전문 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씨에 따르면 이때 미 헌병대가 노동자들에게 다기와 통행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노동자들이 통행증을 내밀자 미 헌병대는 통행증을 빼앗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근거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항하자 미 헌병대는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알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도움을 요청해와 시설관리서령부에서 통행증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시행할 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동안 미 헌병대에 억류돼 있다가 오후 10시경 용산경찰서서 미 8군 출장소(용경 출장소)로 인도되었다. 신병을 인도 받은 용경 출장소 측은 노동자들에게 "미군 영내는 우리 나라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니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 그러나 파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사업장과 회사가 모두 미군 영내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파업을 할 수 있냐"며

각서작성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풀려났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련)의 김정훈 조직국장은 "사측이 미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파업을 방해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통행증을 빼앗긴 탓에 회사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 측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사무금융노련은 오는 2일 한나라당 앞에서 두라코포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두라코포레이션(사장 장성수)의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1년여간 체불된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시한부 파업을 해왔다.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폭력 행사

29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산재노동자 유족에게 경찰과 공단직원이 폭력을 행사해 유족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고 이상관 씨 죽음과 관

련, 유족이 제기한 진상규명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단 측은 7일 간의 시간을 주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한바 있다. (본지 7월 16일자 참조)

그러나 이날 방국윤 공단 이사장은 공단 건물 내에 있으면서도 유족들을 피하다가 결국 오후6시 40분 경 공단 본부 1층 로비에서 2~3명의 유족만을 만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9명의 면담요청자 중 2~3명의 유족만을 만나되 그것도 공단 사무실이나 응접실로 맞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유족이 아닌 시민단체 인사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이었다. 공단 측은 이와 같은 고압적인 태도에 유족을 포함하여 로비에 있던 20여명은 항의의 표시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경찰관 40여명이 건물로 밀고 들어와 아수라장이 된 것은 오후 9시 경이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유족과 농성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고 이상관 씨의 아버지 이석수(67)씨는 목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부상(경추염좌)을 입었고, 어머니 정정순(63)씨도 왼쪽 대퇴부를 심하게 빼어 한강성심병원에서 진단 2주의 관정을 받았다. 119 응급처에 실려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던 이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공단을 찾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산재부지를 위한 단체인지 의심스럽다"며 "공단 이사장에서 말단직원까지 근본적인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99년 7월분 총목차(1402-1424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1402	7/1	1	서준식은 무죄다 -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잊혀진 사람들 -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
		2	평화와 인권④ - 자결권과 미군/ 파업유도공작, 처벌만 남았다 -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무분별한 구속에 쫓겨 - 법원, 철거민에 구속죄부심 인정
1403	7/2	1	지문날인은 망신 -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농촌을 살리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농가부채 탕감 촉구/ 만화사랑방 -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에바다
		2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처(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이창근)/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1404	7/3	1	재소자도 인간이다 -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산하단체도 이적관결 -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행사와 동정
		2	평화와 인권⑤ -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여성노동자 봉진다 -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 서준식 씨 무죄 선고 촉구 - 참여연대 등 성명
1405	7/6	1	'방미 때마다 인권상 -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⑦/ 온전한 특검제 요구 -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에바다 서울 상경 - 명동성당 농성돌입/ 주요공판안내
1406	7/7	1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서준식 재판 변론제게 - 레드헌트 검증 예정/ 총기사용문제 없어 -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 처분
		2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주간인권흐름(6월 28일-7월 5일)
1407	7/8	1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2	휠체어주라, 지하철공사 유감 - 장애인 대책위,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 '위험과 무욕을 감수하겠다'/ 농촌을 바꾸자 -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
1408	7/9	1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만화사랑방 - 준법서약서 강요와 김 대통령 '자유메달' 수상
		2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범죄자 거부 선언 -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현장스케치> 민가협, 288번 제 목요일회 - 마지막 목요일회를 고대하며
1409	7/10	1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이것이 징계 최소화냐 - 서울지하철노조, 대합실 노숙 투쟁 7일째/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 문정현 신부, 무기한 단식농성
		2	"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 -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 학교 통폐합/ 행사와 동정
1410	7/13	1	한총련의 아비 된 죄 -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 조폐공·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김 대통령 약속 세 번, 여전한 '에바다' - 에바다농아원생, 서울상경 투쟁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⑧/ 주간인권흐름(7월 6일-7월 12일)
1411	7/14	1	모국의 치우친 예정 - 제외동포법, 중국·구 소련 동포 제외/ 방향 뒤틀린 제외동포법 추진 -기본 생각을 바꾸라/ 인권교육의 새 도전 - 인권단체, 여름 인권캠프
		2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부장 소희주)/ 지문 날인 거부 이렇게 - 운동본부, 거부자 행동방선 밝혀
1412	7/15	1	혼자 않는 여성 노동자 -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일약/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 천 국정원장 고소/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단식 중인 문정현 신부
		2	<특집기획>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그후 1년 - 실감나는 변화, 남아있는 문제들

<인권하루소식> 99년 7월분 총목차(1402-1424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1413	7/16	1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만화 사랑방 -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약화
		2	<특집기획>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늬 뿐
1414	7/17	1	김철은 자중하라 -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주민카드 거부 확산 - 청년진보당, 전국 서명운동/ 행사와 동정
		2	<특집기획>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1415	7/20	1	새 국면 맞은 에바다 - 이성재 의원 등 신입이사진 활동 재개/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2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 서강대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주간인권흐름(7월 12일-7월 19일)
1416	7/21	1	사법부를 국민에게 -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이/ 20세기 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 앵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2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① - 기로에 선 인권법안/ <새로 나온 책> 아름다운 저항 -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1417	7/22	1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감체위/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 10개월 동안의 투쟁 답아
		2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② -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북한 식량위기 계속 - WFP 위기 보고서 밝혀
1418	7/23	1	내 아들은 억울하다 - 가혹행위, 꺾어 맞추기 수사 의문/ 서준식은 무죄다 -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 만화사랑방 - 신창원과 대통령의 꿈
		2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③ -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 위협받는 8월 투표
1419	7/24	1	갈 곳 없는 결핵환자 -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유도/ 보안관찰 취소관결 - 안유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행사와 동정
		2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 대회 - 일본 오사카,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친선교류
1420	7/27	1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2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 남양주경찰서, 양혜동씨 등 구속/ 주간인권흐름(7월 20일-7월 26일)
1421	7/28	1	퇴직이나 직권면직이나 -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목살사건에 각각 결정
		2	늘어난 여성차별 -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 성차별 호소/ 의료보험통합 등 혼신 - 의보·국민연금 제정통합 촉구/ 평화행진에 끈봉 든 경찰 - 최춘마을 경찰폭력에 항의성명
1422	7/29	1	편견을 바로 잡아라 - 교과서에 실린 동성애자 비하 내용 수정요구/ 식량과 희망을 동시에 - 북녘 어린이 돕기 대장정/ 조사 받아야 할 검찰 -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2	<공청회>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1423	7/30	1	정부가 앞장선 생활학 침해 -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료/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만화사랑방 - 잘못된 '교과서' 생명을 찾아 갑니다
		2	평화를 위한 연대 -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 <대학생 인권캠프 현장을 찾아서> 내일이 된 '인권과 친구하기'
1424	7/31	1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폭력 행사
		2·3	99년 7월분(1402 - 1424호) 총목차

인권하루소식

99년 8월

(제1425호 ~ 1445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3일(화)

제 142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일선 경찰서들이 학생들의 집회내용이 한총련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시민광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현)는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의한 도로점거 농성 등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함으로 집회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총련이 무슨 상관이나며 항의했지만, 동대문경찰서측(서장 김영화)은 "집회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며 결국 집회를 금지했다.

동대문경찰서 정보계의 서무과장 민병춘 씨는 본지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은 한총련의 주장과 동일해도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화관련 부분은 한총련과 범민련에서만 제기되는 주장으로 이런 집회에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회금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종로경찰서도 동대문서와 같은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오는 3일과 4일 양일간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관하기로 한 양심수 석방 등에 관한 서명운동 집회신고서를 받은 바 있는 종로경찰서 정보계의 최우형 씨는 "예전엔 그 학생들(고려대 총학생회)이 한총련 소속인지 몰라서 양심수 관련 서명운

동 집회를 허가해준 적이 있지만 확인해보니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학교여서 집회신고에 대한 처리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도 지난주에 똑같은 이유로 집회를 금지 당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3일 청량리역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청량리경찰서는 집회내용과 한총련 연관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차병지 변호사는 "학교명의로 주최하는 집회에 한총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명확한 이유가 없고 집회의 목적과 내용이 불법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총련 소속 및 내용의 유사성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

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8·15사면에는 제발

정치수배자, 단식돌입

양심수들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거론되던 준법서약이 사면복권 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8월 15일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수배자들이 2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벌이온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의 수배자들의 단식농성은 의정부, 경주, 원주 등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 있는 양심수들의 동조단식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파도가 아아간 인권활동가

성남 외노의 집 박흥식 씨, 다른 생명 구하고 숨져

"부모가 올면 주변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울지도 않아요..."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대표 김혜성 목사, 외국인노동자의 집)의 양혜우 사무국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7월 31일, 충남 서산군 인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의 집 여름수련회에 참가했던 박흥식(한신대 3학년, 28) 씨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고등학생 2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 박 씨의 희생으로 고등학생 2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나 그 자신은 물살에 밀려 사라졌다. 결국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다음날 동료들 곁에 돌아왔다.

고 박흥식 씨가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 노동자로, 공사관 인부로 살면서 소외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뒤늦게 신학과에 입학한 그는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설움을 배웠다. 이번 수련회에도 평생 바다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중국동포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는 기개가 동참했다고 한다. 중국 동포의 설움과 불법체류자란 마음 졸임을 함께 했던 박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중국동포들은 "아들 같은 사람을 우리들 때문에 잃게 되었다"며 오열했다. 박 씨의 발인은 3일 오전 10시 충남태안보건의료원 영안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0342-756-2143 외국인노동자의 집)

원광대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의혹 가정주부 등 10명 연행

지난 달 말, 원광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0명이 보안수 사대와 기무사령부에 연행되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안수사대는 7월 28일 오전 7시 경 양말희(91학번, 주부) 씨 등 4명을 전주 북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연행했다가 46시간 만인 30일 새벽 5시 경 이들을 불구속 입건 상태로 일단 귀가시켰다. 또한 기무사는 27일 정읍 소재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 중인 박인호(원광대 법학과) 씨를 같은 혐의로 연행했고, 29일에는 역시 전주 35사단에서 복무 중인 성기환(원광대 전기공학과) 씨 등 3명이 기무부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관련자들이 지난 95년의 '원광대학교 자주대오' 사건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원광대 자주대오재건위'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대부분 피의자들이 이미 급진적인 학생운동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며, 정선 씨 등 2명은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원광대의 경우 이미 한총련을 탈퇴하여 조직기반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원광대 학생운동은 최근에 북한 기아문제 해결 등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운동을 펼쳐왔다는 점 등 "자주대오 재건" 운운은 도저히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민센터 등 익산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은 2일 '원광대학교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사건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이들은 공안경찰이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해묵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행증을 돌려달라

사무금융노조, 미8군에 항의서한

지난 29일 미8군 영내에서 파업을 벌이던 두라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의 출입증을 미 헌병대에서 압수한데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채운석, 사무금융노조)은 2일 미8군 페트로스키 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통행증을 반환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 측의 요구대로 미 헌병대가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통행증을 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평했다. 또 "통행증 압수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미8군사령관이 협조해주길 촉구했다. 이 항의서한은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보내졌다. <본지 7월 31일자 참고>

주간인권흐름

(99년 7월 27일-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법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 (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 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 (28일)/ 감옥안 양심수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육중투쟁위원회 건설 (30일)/ 민족회의, 송두율 교수의 조건없는 귀국추진 촉구 (8월 1일)

3. 편견을 바로 잡아라
동성애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불건전한 성문화, 에이즈의 원인 등으로 기술하자 그 왜곡됨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29일)

4. 뒤로 가는 차별저수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성적차별에 의한 여성의 부당해고와 직장내 차별 등이 증가했다고 주장 (28일)/ 노동부, 임금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발표, '98년 임금구조 실태분석'에 따르면 월수입 5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97년 2.5%에서 98년 2.7%로 증가한데 반해 2백 만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는 97년 20.4%에서 21.2%로 증가 (30일)

5. 복역동조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 (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 씨를 만나 상지대 반환의사를 타진해 상지대 교수, 학생 및 지역단체들 반발 (29일)

7. 아픈 상처 또 찌르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 이재관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진상규명 노력 안해,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 강제 연행, 유가족 부상 (29일)

8. 우리가 언제 편히 잠들 수 있느냐
씨랜드 희생자 유족들, 공무원의 관리태만을 지적하며 경기도, 화성군의 보상을 주장했으나 견해차로 보상문제 난항 (27일), 소망유치원 소재의 송과구, 씨랜드 추모공원 조성 계획 밝혀 (29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4일(수)
제 142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국민회의가 2일 시작된 206회 임시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두 법안은 과거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안을 보면 대상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시키는 한편 그마저도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평화와인권연대 뿐만 아니라 몇몇 인권단체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틀린 법안들

평화와인권연대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회의의 의문사특별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한 데다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제외한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의 경우도 그 적용범위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안임으로 제고한다는 것은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두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창복) 측은 "국민회의와의 논의 속에서 고문, 실종 등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기관이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비밀누설자에 대한 처벌조항금지 삭제, 공소시효 배제 등 조사권 강화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보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화운동법안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문사특별법안은 금주 내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새로 나온 비디오

또 하나의 세상(행당동 사람들 2)

기획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제작 푸른영상/ 감독 김동원/ 시간 42분/ 2만 5천원/ 구입문의 02-823-9124

가난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디지털 6mm 카메라에 잡힌 행당동 철거민들은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가난이 고맙다고 말한다. 왜일까?

성난 파도같이 찌푸리던 흑백 사진 속 장년의 얼굴위로 주름살 난 중년의 넉넉한 웃음이 겹쳐진다. 가난의 질긴 대물림 속에 태어나 산동네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철거민이 된 장년. 이 집에서 쫓겨나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단 생각에 철거싸움을 시작해 경찰서 드나들기를 제집처럼 했다는 행당동 주민들은 3년 동안의 철거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한 마을의 어엿한 주인이 됐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가 이주단체에 입주해 송학마을을 만들고 그들 모두가 출자한 돈으로 생선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기면서 이웃은 천척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명절 떡국도 한상에 차리는 사이가 됐다. 주머니에 무엇인가 있었다면 자신의 삶을 찾아 헤머졌을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토양 속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찾고, 행복을 찾고, 서로와 자신을 찾은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는 갈등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타지역 철거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하는 기획의도에 따라 편집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원 감독은 기록영화가 꼭 객관적일 필요는 없으며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관점과 그 속에 배어있는 감동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춘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2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철거지역 "최춘마을" 골리앗(망루)과 그 주변에 있던 전동인(44) 씨 등 철거민 11명 중 7명이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춘마을 철거민 이효자 씨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피멍이 들고 머리 뒤쪽이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었다. 그뿐 아니라 철거 용역원이 소화기(화재진화용)를 터트린 후 호스를 이씨의 입에 넣는 등의 심한 폭력을 행사해 철거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골리앗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던 김진완 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자진해 투항하면 최춘마을 철거민 전원을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지역주민 김제삼 씨 등 3명이 골리앗에 올라가 동료 주민을 설득해 이들은 2일 밤 12시 30분 경 골리앗에서 내려와 자수했다. 그러나 불구속 처리 약속과는 달리 3일 현재, 단독으로 자수한 철거민 박창만 씨를 포함해 최춘마을 철거민 12명이 남양주경찰서 수사1계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오후 4시 30분 경 본지 기자가 철거민들을 면회했을 때 투명창 너머 철거민 손양호 씨의 오른쪽 팔에 커다란 피멍이 들어있음을 확인했고 철거민 황수홍 씨의 경우 연행당일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어깨가 결리는 아픔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몇 명이 불구속 처리될지는 현재로써 불투명하다"며 "철거민이 자신의 집에서 철거반대를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사유지인 골프장에 모여 철거반대를 하는데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회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이 이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편집자 주> 전북평화화약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신는다.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경찰권과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거나 인신의 구속을 당한 자 또는 그로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과 진보당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건이 만약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살인, 사법살인에 해당한다.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따라 희생 된 것이건 그들의 명예는 모두 회복되어야 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또한 명예회복 및 보상의 시점을 69년 8월 7일로 설정하는 법안의 내용으로 5.16쿠데타 및 그 이후 정권에 저항하던 사람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 적용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61년 5월 16일이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정부수립일인 48년 8월 15일이 되어야 한다.

고문과 불법구금 수사도 가능해야

의문사특별법안 역시 조사대상을 한정한다. 이 법안은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매우 모호해 범주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법안은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 의문사 뿐 아니라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이의 발생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환경의 개혁도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인권침해를 밝히는 것부터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은폐될 수 있었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찾아내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5일(목)

제 142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캠페인이 오늘부터 7일까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주최로 명동성당 일대에서 열린다.

민가협은 99년 7월 7일 현재 2백97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다며 이들의 전원 석방과 풀려난 이후에도 공민권에 제약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조치가 진정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95년을 시작으로 5년째 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올해의 캠페인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우리 사회의 각종 인권현안을 사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또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권오현 회장은 "양심수 사면의 조건이던 준법서약이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처럼 국가가 악법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한편 건전한 비판세력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며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등의 악법철폐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 수상과 함께 대대적인 양심수 석방의사를 밝힌 후 어느 때보다도 8·15사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10시, 김수환 추기경,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각계인사 99인이 참여한 인권선언으로 그 서두를 장식한다. 선언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권의 회복이며 21세기를 관용과 화해의 시대로 맞이 위한 첫걸음"이라 뜻박고 "인간의 의식을 이분법으로 가르고 안보는

리를 심화시키는 국가보안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행사에는 6일 열리는 '99 인권우드스탁'이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현안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행사에는 양심수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호주제 등 다양한 인권현안이 퍼포먼스와 노래, 시, 춤 등으로 표현된다. 에바다 농아원생, 국정원 프락치사건 양심선언인 강성석 씨, 지문날인거부 심인자 등이 참여하며, 또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 인권현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저녁에는 오소희(여성학자), 명계남(영화배우) 씨가 진행하는 '양심수와 함께 하는 시민가요제'가 열린다. 상설행사로 정수복(방송인), 김정란(시인) 씨 등 사회인사 21명이 참여해 양심수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감옥체험'과 '폼짝마! 국가보안법'이란 제목의 '인권만화전이 마련된다.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유기협 국회 앞 단식농성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대표 배은심, 유기협)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민주화운동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5일부터 국회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배은심 유기협 상임대표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74일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락에 얽매어 국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된 개혁법안의 입법을 방기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법과 의문사특별법의 제정 역시 미루고 있다"며 "이제는 목숨을 걸고 국회의 개혁법안 입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배은심 유기협 상임대표(고이한 열모), 박정기(고 박종철 부) 씨 등 모두 7명의 유기협이 참여했으며 단식은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기협의 국회정문 앞 천막단식농성에 영등포경찰서측은 난색을 표하며, 5일 오전 10시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하겠다고 전해왔다.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버마 군부, 3살 난 여아 투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마 군부에 의해 체포·구금된 세계 최연소 양심수의 현황을 폭로했다.

그 주인공인 타이트 무나 킨은 겨우 3살난 여자 어린아이이다. 킨은 지난 7월 19일과 24일 사이에 버마 중심부에서 체포된 19명의 양심수 속에 들어있다. 이들 양심수는 압살된 버마의 독립투사이자 수지 여사의 부친인 아웅산 장군의 52주기 추모식 행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다. 버마 군부가 3살난 여아까지 구금한 이유는 아이를 인질로 하여 도피중인 아버지를 잡을 목적에서이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진압하려는 버마 군부의 잔인성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앰네스티는 비난했다. 현재, 킨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앰네스티는 수감자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에 흔히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하며 버마 군부에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철거 용역원의 폭행으로 철거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폭력을 휘두른 용역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귀인마을 주민인 송명희(여, 33) 씨가 10여명의 철거용역원(한경(주) 소속)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6월 18일. 다른 철거지역에서 이불과 김치를 얻어 돌아오던 송 씨는 귀인마을 근처의 놀이터에서 철거용역원들과 마주쳤다. 이들은 '사제총을 가져왔냐며 비아냥거렸고, 송 씨가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무슨 참견이냐고 대꾸하자 송 씨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젓가슴을 발로 짓밟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날 밤 송 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근처 세종정형외과로 옮겨진 후 두 달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달 5일 송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안양 경찰서 형사 2반 권형설 형사를 찾아가 진술서를 쓰고 진단서(다발성 늑골골절-4주)와 용의자 사진을 주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권 형사는 "동료 김아무개 형사가 철거민 관련 사건으로 종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 용의자 사진까지 제시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가 누군지 알게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에 집단폭행을 당해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철거민 문제로 종합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송 씨는 "경찰이 자신의 서류를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 씨를 포함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귀인마을 철거민은 4명이다. 송 씨의 부상에 앞서 가족이 없는 박순규(77, 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는 용역원이 비키라며 들어 던지는 통에 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이선원(여, 38) 씨가 용역원에게 맞아 흉부좌상을 입었고, 이 씨의 남편 최승호(남, 46) 씨도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다. 그러나, 이들 철거민들은 4일 현재까지 치료비를 한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종정형외과의 사무장 신현승 씨는 "약 1천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짓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계속 살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도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용역회사를 상대로 3일 안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귀인마을은 9천8백여명 규모로 총 140세대가 살아왔으나 최근 30여세대의 철거민들만이 남아 있으며 이들에 대한 용역원들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인터뷰〉 동국합섬 퇴직자 정희양 씨 동료들의 불행이 염려된다

10년 동안 동국합섬에서 근무하다 올해 퇴직한 정희양(36) 씨는 현재 암투병 중이다. 정 씨는 지난 6월 회사를 퇴직한 이후 사회단체 등에 동국합섬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호소해왔다.〈편집자주〉

● 동국합섬은 어떤 회사인가
스판텍스, 플리에스텔 등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들을 많이 취급한다. 특히 스판텍스 생산라인은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환경문제와 각종 부작용 등으로 타 회사도 생산을 포기한 상태다.

● 회사의 작업환경은 어떠한가?
동국합섬의 건물 중 몇 개는 조립식건물이다. 화학약품을 다룸에도 노동자들은 면으로 된 일반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또한 소음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귀마개를 걸 뿐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난청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많은 노동자들이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과 피부병 등 온갖 병에 시달리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 노동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나?
95년도에 피부병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고 회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병이 난 노동자들만 다른 공장으로 인사 이동시켰다.

● 현재 몸 상태는?
초기에는 붉은 반점이 온몸에 생기더니 가려움증을 동반한 종기들이 수 없이 생겼다. 오른쪽 귀가 아파왔고 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다 결국 올 2월에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외이도 전암 말기라 2달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 했다. 24시간동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정맥까지 파고든 암세포들을 제거할 수 없었다.

● 사측의 태도는?
회사는 수술 후 실밥도 풀지 않은 나에게 '휴지기간이 끝나 더 이상 급여(60만원)가 지급되지 않으니 출근을 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내가 직업병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남한진 상무이사는 '회사는 10원 짜리 하나도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사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돈을 줄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그러더니 노동자들의 성금을 거둬왔다. 병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 직업병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이번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 현재 상황은 어떤가?
수술비 때문에 엄청난 빚을 졌다. 아내가 청소 일을 해 벌어들인 20만원으로 4식구가 생활한다. 쌀이 없어 끼니를 거를 때도 있어 심신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동국합섬에서는 지금도 피부병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사실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동료들의 불행이 염려스러워 포기할 수가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6일(금)

제 142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경찰이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청년진보당 총청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역에서 '민주적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경찰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던 집회참가자를 폭행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청년진보당 총청위원회 위원장 김미석 씨를 구타해 청년진보당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폭행으로 집회에 참가했던 김미석, 김승현(24) 씨 등 7명이 부상당했으며, 김미석 씨는 머리를 다쳐 집회도중 병원으로 후송됐다. 머리를 15여 바늘을 꿰맨 김 씨는 현재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태가 확대되자 동부경찰서 서장 한상익은 5일 김 씨가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와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청했다. 하지만 청년진보당측은 "그 동안 만연돼온 경찰의 폭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일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을 평화적 집회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던 유가족과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5일 오후 3시 고 이상관 씨의 유가족과 노동자, 학생 등 150여명은 서울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경찰력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는 한편 김중권(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씨 등 42명을 대거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 이상관 씨의 형 이상근 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연행된 사람들은 영등포, 구로, 강서 경찰서 등에서 집시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폭력연행과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5일 밤 현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 땅에서 진혼굿을

버마 8·8 민중항쟁 추모제

버마 민중항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가 오는 8일 오후 2시 명동에서 열린다. 8·8은 버마인에게 있어 한국의 5·18에 해당하는 뜻깊은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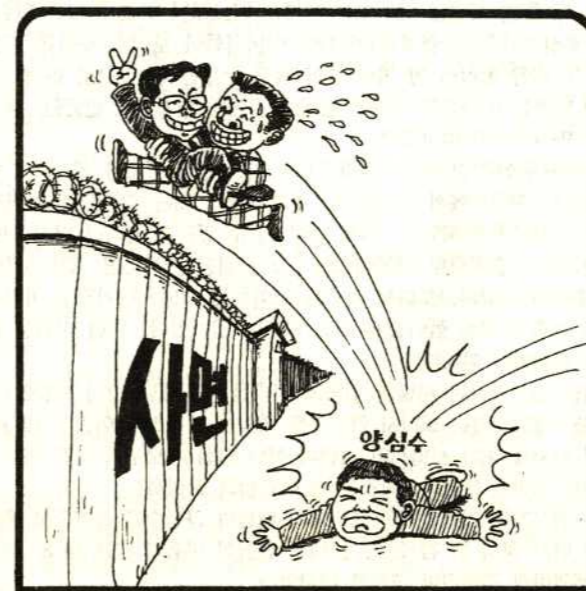
버마민주연맹(NLD) 한국지부와 서울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 88년 8월 8일 버마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및 '버마 민주화와 대학교육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62년 군사쿠데타로 군부독재가 수립된 버마에서는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들은 88년 8월 8일 전국적인 민중항쟁을 일으켜 네윈 군부독재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했고 군부는 총으로 이를 진압했다. 2천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8·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는 아직껏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버마엔 군부독재가 계속돼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대학은 폐쇄된 상태다.

이번 8월 8일 집회는 일본, 미국, 호주 등 20여 개 국에서 공동으로 열릴 예정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김재광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 사무국장)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료의 인상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직장의료보험(직장의보)조합(한국노총 산하) 등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의보통합이 위태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직장 의보와 지역의보의 연내 통합방안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보가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지역의보의 재정안정을 위해 재정의 50%를 국가에서 충당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국고보조는 줄어 현재 국고보조는 25%선에 그치고 있다. 국고보조 감소세정은 불가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과 함께 고스란히 지역 가입자에게 전가돼 지역의보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

직장의료보험료의 경우 사용자가와 노동자가 각각 50%. 직장의료보험은 지역의보 제정의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 시 봉급자들의 부담이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 지역의 의료통합에서 가져올 노동자들의 부담 인상은, 현재 30%선인 자영업자의 소득과악을 80%이상으로 높여 유출되고 있는 재원을 정부가 징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또 조세문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자본가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공통적인 불만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공통적 불만은 의료보험료 납입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입원과 진찰 등 일상적 진료행위에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의료비의 최소 50%를 넘어 보험혜택이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 문제는 건강권이 사회적 권리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의료는 치료의 차원이 아니다. 의료는 예방과 치료, 치료 후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전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사회적 의료혜택이며, 이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달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의료는 상품으로 변질돼 예방이 등한시되고 치료위주의 과잉진료가 성행하고있으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여파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상실되고 있다. 이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미흡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편견에 맞물려 건강권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밑바

닥에는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가능한 사회적 재원을 확보해 사회가 의료보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의보통합의 본질적인 의미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총 사회적 재원이 개인의 직장,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 의료의 무한 경쟁은 예방사업의 부재와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왔고 국가는 책임져야 할 건강권과 그에 따른 의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연내 의보통합을 시작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과 직장을 불문한 총 재원의 확보와 혜택, 철저한 누진적 보험료 징수,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족되는 보험급여(사치성 의료는 제외) 확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인하를 이루어야 한다.

(현장스케치)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명동을 찾아오기에 어느덧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이 되어 버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의 첫날이었다.

"양심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갇혀있는 양심수가 있나요?" 지나던 한 시민이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서명을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반문하며 서명대를 찾은 시민들이 5일 하루만 5백 명을 훌쩍 넘었다.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이번에는 나오겠지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어머니들이 보랏빛 수건을 힘껏 동여맨다. 두 팔을 벌리면 양 벽에 손이 닿고 누우면 발 밑으로 한 뼘 공간이 남을까 말까한 0.75평의 밀폐된 감옥에 김어준(판지일보 발행인) 씨 등 6명의 자청 양심수들이 다녀갔다.

대전교도소에 갇혀있는 류라진(73) 씨의 만딸 류소영 씨, 중 1 때 투옥된 아버지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18년 수감으로 이어진 옥고를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같이 살 수 있는가 싶더니 다시 94년 구국전 위사건으로 감옥으로 되돌아갔다. 그 세월동안 류소영 씨는 3명의 아이를 둔 주부가 되었다. 또다시 가슴을 조이는 8·15는 다가오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되길 바라며 울먹였다. 이런 마음을 품는 이는 비단 류씨만이 아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람을 위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양심수에게 준법서약을 쓰게 하는 것은 또다시 양심수를 죽이는 행위라며 이번 8.15 광복절에는 몇몇 인사에 대한 선별적인 사면이 아닌 양심수 모두가 조건 없이 사면돼야 한다는 염원을 모았다. 이것은 한 여름밤의 꿈일까?

한 참석자는 기념일이면 요란하게 떠들며 양심수를 풀어주고 풀어준 양심수를 다시 하나 둘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8·15 특별사면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7일(토)

제 142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 또 성추행

피해여성들,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

집회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관할경찰서장과 가담 경찰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안국동 소재 현대그룹 본사건물 후문에서 현대중기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현대중기산업 고용승계 촉구집회'에 참석했던 조시아(전국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조직국 차장) 씨 등 3명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의 김영화 전 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과 경찰들을 5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가슴 만지며 치욕적 연사

고소인 조시아 씨는 "연행과정에서 옷이 벗겨져 올라가 가슴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안았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옆에 있던 전경은 '너 아까 내가 찍어줬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마구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전경의 폭력으로 흉곽에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홍지영 씨 역시 "갑자기 옆에서 양옆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양쪽 가슴을 누군가 마구 주물러 돼 너무 소름이 끼쳤다. 내 가슴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며 용기를 내 항의했지만 갑자기 버스안의 불이 꺼지고 여기자서 심한 욕설이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길을 가다 봉변을 당한 시민 유주미(서울 광진구 군자동) 씨는 "도로를 지나던 중 집회광경을 목격하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달려든 경찰에 의

해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경이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리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슴을 만져냈는데 이에 항의하자 전경은 '절벽 같은 가슴 좀 만지면 어떠냐며 치욕적인 언사를 해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유 씨는 차안에서 다른 여성들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에 여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참문을 닫는 한편 불을 꺼 전경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 고 밝혔다.

조 씨 등은 고소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를 짓밟고 성추행을 통해 연약한 여성들의 인권까지 송두리째 짓밟았다"며 당시 범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중기산업(주)노동조합과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은 6일 성명을 내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집회참석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가담자 전원의 사법처리를 위해 제 시민·여성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버미 민주항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및 시위
 - 8월 8일(일) 오후 2시/ 명동
 - 내용: 분향식 및 추모곡 그리고 퍼포먼스
 - 버미 현재 상황과 국제연대의 의의에 대한 발언
 - 버미 민주화와 대학교육제도를 촉구하는 한국국민서명운동
- 한반도 냉전정신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8월 12일(목) ~ 8월 14일(토)/ 문의: 02) 708-4981
 - 내용: 개막식 및 제1학술토론회(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회의실) 제2학술토론회(14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ASEM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샵(14일 오후 2시/ 타워호텔) 기타: 환영만찬, 평화 기원 작은 마당 등
 - 주최: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식
 - 8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군자차량기지 교육원 3층 대강당
 - 주최: 서울지하철노동조합(문의: 2243-3321)
- 이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청회
 - 8월 13일(금) 오후 2시-5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새천년 청소년 문화축제 1999
 - 8월 13(금) ~ 15일(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국립중앙박물관 광장
 - 주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문의 326-2730)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뇌성마비 장애인이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당당 변호사 임영화)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이규식 씨.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뇌자상 및 경추부 영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 씨와 장애인단체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휠체어

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해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안전장치 설비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서울지하철공사측은 본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이 씨는 "휠체어 리프트의 시설주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와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했다"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타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생인 이일한 어린이는 한 달에 한번 구멍이 송송 뚫린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를 만나는 짧은 시간에 간수 아저씨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가장 싫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풀려난 요즘은 아버지와 놀려면 '이제는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감옥에 있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한다. 이일한 어린이의 제안으로 "어린이 만세"를 외치며 5백여 명이 하나되어 날린 종이 비행기는 하늘을 가득 수놓았다.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캠페인 행사의 하나인 '99 인권 우드스타'는 이렇듯 관객과 출연자의 구분이 없는 한 호흡, 한 무대를 이루었다.

이들의 환호에 찬물을 끼얹듯 국가보안법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자주, 자주, 통일을 앞당기는 원터치 성냥'을 파는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연행사가 나타나 성냥팔이 소녀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연행한다. 그리고 '성냥팔이총연합회'를 이적 단체로 규정해 전국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총검거령이 내려졌다. 관객들이 분노로 술렁이는 가운데 극에 참가한 한 학생이 외친다. "이 땅과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이적행위라면 기꺼이 죄인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복쪽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그는 "여러분 같으면 복을 적으로 규정하고 파연 통일을 하고 싶으세요?"라고 묻는다.

1천일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에바다농야학교 학생들의 수화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간단한 수화를 배우며 마음으로 오고감을 나누었다.

양심수가 사라져 민가협이 없어질 날을 기원하며 참석자들이 '민가협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가운데 양심수의 어머니들이 무대에 올랐다. 민가협의 임기관 상임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가협이 동창회 정도가 되어 먹고 마시는, 덩가 덩가하는 단체가 되겠구나 반가워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다면 우리가 싸워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인권현안들을 되새기며 참가자들이 밝힌 촛불 속에서 '99 인권 우드스타'는 막을 내렸다.

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지난 3일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한 출소자가 교도소측의 무리한 징벌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아우(51, 여)씨는 징벌을 받는 도중 교도소측의 무리한 포승조치로 피부상처를 비롯해 관절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7월 24일 소내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등 소내 소지 제한 물품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돼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승시감을 당해 징벌방에 수감됐다. 유 씨는 "포승과 수갑이 너무 조여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결국 양쪽 팔이 마비되고 손과 등, 배 등의 핏줄이 터졌다"며 "교도소측에 통증을 호소하며 상처 치료와 포승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26시간동안 포승에 묶여있었고 징벌방에 수감된 8일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씨의 주장에 대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한재준 씨는 "부정물품을 압수하려하자 유 씨가 소란을 피워 포승과 수갑을 채운채 징벌방에 수감됐다"며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고, 유 씨에게 행해진 모든 행위는 징벌위원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2일 만기 출소에 서울에 거주중인 유 씨는 현재까지도 피부상처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의 변호사는 "포승과 수갑 등의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도주, 소요,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구 교도소측이 한번의 소란을 이유로 유 씨에게 26시간동안 포승을 채우고 8일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사고예방차원이기 보다는 징벌차원으로 보여져 계구 사용의 적정성을 넘은 불법행위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0일(화)

제 143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미 헌병대가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하여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지난 6일 오후 9시경 문정현(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신부 등 전북지역사회단체 활동가 3명이 미 헌병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문 신부 등은 한미행협 개성 촉구를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미군기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합법집회가 경찰에 의해 무산되자 오후 7시경부터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적 집회보장과 군산 미 공군사령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중무장을 한 미 헌병대가 다가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문 신부의 손을 전선 플라스틱 줄로 묶은 후 연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오두희(전북평화외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씨와 김민아(군산우리찾기시민모임 간사) 씨 역시 손이 묶인 채 연행됐다. 문 신부 등은 팔방에 감금됐으며 곧 전선 줄 대신 수갑이 채워졌다.

영문도 모른 채 미 헌병대에 불법구금을 당하던 3인은 밤 10시 10분 경 군산경찰서에 인계됐으며 이후 군산경찰서에서 새벽 2시경 풀려났다. 오 씨는 "미 여자 헌병에 의해 몸수색을 당했는데 남자헌병들이 곁에 있어 이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남자헌병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몸 깊숙한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오 씨는 강제연행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 신부는 "한국경찰은 우리가 미군에 의해 강제불법 연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미행협만

만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자국민보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김동심(27) 간사는 "한미행협상 미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술 더 뜨는 경찰

한편 같은 날 오후 4시 기아특수강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군산시 기아특수강 정 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경찰들에게 폭행 당하는 한편 강제 연행됐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사무국장 최제석 씨가 전경의 방패에 찍혀 혼란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는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순준 사무처장 등 7명이 강제 연행됐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군산경찰서 앞까지 항의하자 경찰의 폭행은 오히려 계속돼 개정병원 조합원 신대욱 씨 등이 부상을 입고 실신해 병원에 후송됐다. 이들은 9일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중이다.

7명의 연행자 중 6명은 7일 오전 7시경 풀려났으나 윤철수(군산노동자의 집) 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의 이유 없는 폭행이 계속되자 9일 오후 2시, 전북 지역 시민단체 회원과 노동자들은 '경찰폭력과 구속, 미 헌병대의 불법 구금'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에 후송됐다. 항

의 집회는 9일 오후 8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때주미군기지 앞에서의 집회가 계속되자 미군과 한국정부측이 군산경찰서에 압력을 넣어 경찰들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경찰서측은 "기아특수강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전투경찰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한편 부상자 발생과 미군의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어디있나 살상무기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계속된 집중호우로 각종 탄약이 대량 유실된 것과 관련 사회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대표 서제일)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대인지뢰는 한번 유실되면 부피가 작아 그 숫자 확인이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국방부에서 대인지뢰 유실 방지와 수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 및 지역의 명확한 공개 △유실된 지뢰 수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을 통한 긴급지원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번 호우로 대인지뢰가 유실된 지역은 파주, 연천, 철원 등으로 화천군 육군부대에서는 무기 저장용 컨테이너가 유실됐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유실된 무기와 대인지뢰는 하천을 통해 민간인 거주 지역에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 그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강상류지역 홍수로 인해 유실된 지뢰는 358개로 이중 회수된 지뢰는 47개에 불과했다.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농성 1주년 맞은 조계사의 표정

수배중인 자식을 둔 한 어머니는 자식이 하루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와 자유의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9일로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촉구 농성 1년을 맞은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들은 8·15를 앞두고 마음이 뒤숭숭하다. 이들은 수 차례의 단식농성과 삭발로 이어진 험겨운 수배해제 투쟁을 만 1년간 해왔다. 농성 1년을 맞은 9일도 이들은 조계사 농성 천막 앞에서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김현철 사면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철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면이 거론되고 있고 또 김 전대통령은 정치 재계를 피려하고 있다는데 분노한다"며, "장대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정부가 보이고 있지 않아 인권대통령이란 말이 부끄럽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김현곤(32, 조계사 농성자) 씨의 어머니 장희수(60) 씨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도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 드러눕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흐를 수록 농성자들의 어머니들 입에선 김 대통령을 빗대어 "민을 놓하나 없다"는 등의 거친 말이 흘러나왔다. 이들의 불신과 혐의를 정치권은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김현철 사면은 개혁정신에 역행

한편 9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철하카페 느티나무에서 김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면인 김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김 씨의 사면은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완성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의 형평성과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지시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집회 및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간인권호름

(99년 8월 10일-8월 16일)

1. 사면이 해폰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시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 사면에 강력 반발, 네티즌 92% 반대(사시(4일))

2. 울 역류가 마지막이길

297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민가협 주관의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캠페인 명동 성당 일대에서 펼쳐져, 각계 사회인사 99인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인권선언 발표, 우리사회 인권현안을 다양하게 조명한 인권 우드스탁, 하루감옥체험 등의 행사 답아(5일-7일)

3. 경찰폭력 집회장악 지나칠 수 없다

합법적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 잇따라, 지난 6월달 안국동 현대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고용승계 집회에 참가했던 조선아 씨등 3인, 경찰연행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며 전 종로 경찰서장 고소, 청년진보당, 8월 2일 집회과정에서 경찰폭력 주장하며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고소(5일)

4. 그날이 언제 오나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등의 임시국회 내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4일)

5. 고용안정의 불을 밝히려다

한전노조,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첫 파업 결의, 전체 2만 4천5백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78.25%가 투표, 이중 78.95%가 파업지지(6일)

6. 한국 하늘 아래서 외친 버마 민주화

버마민주연맹 한국지부, 명동에서 88년 8월 8일 버마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을 애도하는 추모 집회 개최(8일)

7. 합부로 대하지 말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성폭력 관련 상담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 전체 성폭력 가운데 직장 내 상사와 고객에 의한 성폭력이 22.8%,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11% 인 것으로 드러나(4일)/행자부, 여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원 에티켓 배포,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개설(8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1일(수)

제 143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무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표현제한을 부추기고 지속적인 통신검열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향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이라고 생각되는 글과 글을 게시한 이용자의 ID에 대해 삭제 및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통신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권리를 침

해당한 ID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부는 지난 6월 21일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무누리 통신방에 게시된 글 5개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행하는 불온통신에 해당한다며 나무누리측에 글의 삭제와 이용자의 ID 1개월 사용중지를 요구한 바 있어, 통신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통신인들의 심한 반발을 사왔었다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사면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지가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가 양심수 사면의 기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심수 사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준법서약서와 관계없이 풀어준다는 △수배자들 역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수배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최종적인 입장은 나온 바 없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의 서달원 국장은 "4일 대통령이 법무부측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얘기를 전달받은 바는 있지만 그렇게는(기사의 내용대로) 결정이 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쪽(민정수석실)에서는(사면이) 잘 될거라는 생각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준법서약서를 사면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인권상을 타면서 약속한 대사면 약속을 준법서약서를 빌미삼아 저버리진 않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면에 대해 끝까지 대통령을 믿겠다고 밝혔다.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1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창규(전 남총련 의장) 씨 역시 "대통령이 대사면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사면법 제9조의 2에 대통령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청원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결단을 통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예외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의도에서 고려된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판단임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이경주(경북대학 법학과 교수)

나는 비를 유난히 좋아한다. 장대비 내리는 차없는 신작로를 원없이 걸어 본 유년시절의 기억때문에 그렇다. 한 여름 신작로를 그것도 작열하는 8월의 땀별아래 제수없이 걸어가게 된 내게 장대비는 구원이요 희망이었다.

그러나 살다보니 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어렵잖이나 깨닫는다. 사람 가슴을 후련하게 만드는 장대소나기도 있지만, 사람 가슴을 무너지게 만드는 큰비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올해의 비는 구원과 희망의 가슴 후련한 비는 아닌 것 같다. 축대가 무너지고, 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이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비다. 하지만 그런 큰비가 해마다 있었으니까 올해 더욱더 싫은 온전한 이유는 아니다. 올해의 큰비가 싫은 이유는 그렇다. 임창철 씨가 휩쓸려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열망마저 휩쓸고 가버렸기 때문에 싫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휩쓸어 간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휩쓸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싫어 죽겠다.

물론 현재 정치부패의 전형 중의 하나인 뇌물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형법이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딱깁이라는 이름으로 수수되고 있는 뇌물이 과연 형법 제129조(수뢰)와 제132조(알선수뢰), 특가법 제3조(알선수제)에서 규정하는 뇌물인가를 입증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뇌물을 제공한 측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인지 대가성은 없다'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것이지 공천을 부탁한 일은 없다'라고 발백하는 현실에서 뇌물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한 자금거래의 특색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정치인을 기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정치부패의 전형중의 하나인 뇌물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적 제약도 뒤따른다. 첫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모의원은 '돈은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이전에 받았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뱉듯이 나온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간과한 얘기인 것이다. 둘째, 시효의 제약이 뒤따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에 의하면 수뢰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7-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5천만원 이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부패의 원천적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실제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추궁으로 결론나가는 대단히 쉽지 않다. 검찰수뇌부와 정치검사가 정치인 사건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왔다는 것은 심재륜 대 구검장의 성명서 등에서도 고백된 바 있다. 특히 검찰청법 제7조1항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이 정치시너화되는 근거조항으로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찰의 정치시너화에 맞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는 재판부가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단단계 승진구조의 포로가 되어 있는 법관으로부터 법관생활 중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대소나기를 기대하기가 낭만한 일만도 아니다. 정치부패에 대하여 형사책임추구만을 갈구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우리 헌법

은 국민주권 하에서의 공권력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치가 등의 권력담당자는 형사책임 이외에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책임이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가 등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책임의 원인을 위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적당한 행위와 능한 행위에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으면 정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정치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공권력 담당자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형사책임에서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게는 (의심스러우면 불이익을 받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 선출직 공무원 소환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이 국민소환제의 여지를 헌법원리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도 않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이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한 선거에 터잡은 순수대표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표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다든지 명령적 위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헌법의 대표제를 이상과 같이 풀이한다면,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형사책임추구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작열하는 8월의 대지에서 정치개혁의 장대소나기가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유년시절에 대한 집착일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2일(목)

제 143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치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환,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은 광화문 서울은행 앞에서 "김현철 사면반대와 양심수 297명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사면은 잘못된 법 집행과 경직된 법치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김 씨와 같은 권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변치사면이 운운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적 거래로 사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심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게 은전이나 은혜를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고위층 부패 사범인 김씨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경실련 고계현(35) 시민입법국장은 김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또다시 변치사면을 내세우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부분사면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가협 등 7개 인권

사회단체는 부정부패 사면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악용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8·15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오늘(12일)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 (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이 이를 종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들과 동반장들에 의한 개별방문 및 명단공개 등의 행위로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

들을 행정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을 비롯한 통, 반장들이 주민등록갱신을 강요하면서 직권말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대문이나 아파트 입구에 미 갱신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친인척관계를 통해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하는 경우 등으로 이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사나 반강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운동본부의 홍석만 씨는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주민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모욕적인 언사나 협박을 행한 공무원의 신분과 이름을 확인하고 담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권말소의 경우 비거주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관행상 학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현 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도 이를 용인해왔는데 이를 문제삼아 직권말소를 위협해 왔을 시에는 폐쇄적 적용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알림

'레드 헌트 검증 예정'

일시 : 8월 13일 오후 4시
장소 : 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

일반인 방청은 안됩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본지 발행인 서준식 씨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서준식(인권운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횡포 앞에서 숨죽여 었드리면서 그 지나간 어둠 뒤에 민주주의 대명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것이 너무도 천진스러운 착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준법서약논쟁을 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준법서약제도를 주제로 한 TV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어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 텔레비전 앞에 좌정했다. 3천 명 가까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키겠다는 8·15를 앞두고 또다시 준법서약논쟁이 불붙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심의 자유'를 대치시키는 양상은 작년과 다를 바 없지만 올해는 정부가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물론 모든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군사정권도 안하던 짓"임에 틀림없다.

준법서약제도 존치(存置)론자와 폐지론자 각각 2명이 벌이는 1시간 짜리 토론에 대하여 시청자의 ARS투표로 '승부'를 내는 포맷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양쪽 논자 각각 1분 30초, 질문과 답변 각각 5분... 이런 식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토론에서 대중들을 손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주장은 역시 스테레오타입과 형식논리 편이었던 것이다.

너무도 낮은 주장 - 북한의 위협

존치론자의 주장은 당연히 너무도 낮은 것이었다.

첫째, 북한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둘째, 사면이란 국가의 '정책적 시혜'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쳐 우리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느냐?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해 보라.

이 낮은 형식논리의 위력은 압도적이었다. ARS투표 결과는 58% 대 42%로 존치론 승리...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인권의 논리'가 냉전과 국가주의의 논리 앞에 이토록 허망하게 꺾이는 것을 목도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 묻고 싶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지금도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90년대 들어 사회주의 나라들의 동맹 관계는 깨끗이 소멸되고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한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 준법서약제도가 존재해야 막아낼 만큼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사면은 백성의 당연한 권리

'사면'이 국가가 수인을 용서하는 행위는 설명은 논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독재자들이 수인에 대하여 그리도 자비로웠기 때문에 건국 이래 81차례나 사면을 했던 말인가?

사면은 잘못된 법집행이나 잘못된 정치, 국민적 갈등으로 말미암은 국가적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구실을 해온 것이다. 즉 그것은 잘못된 정치, 잘못된 법, 잘못된 법집행이 판을 치는 못난 나라에 태어나 고생하는 백성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가는 원래 국민에게 어떤 정치질서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어떤 사상을 선택할 것을 강요해왔다. '민주적 선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의 합의는 국민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는 합의인 것이다.

그들의 존재와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법에 의해 구속되는 그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은 그들의 사상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결핍하면 '6·25 때의 송고한 희생'을 들먹이는 것은 비열한 '사상검증'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젊은이들은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저 가기 싫은 전쟁터에 끌려갔을 뿐인 것이다.

분명 우리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특징지은 군사독재정치는 타도했다. 그러나 군인들이 통치했던 오랜 세월동안 그 폭력정치와 발맞추어 우리를 억압해온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 위에 존재하고 '국익'이 개개 국민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박혀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실현을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국회의원 얼굴좀 보자

면담요구 노동자 연행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현대중기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대중기노동자들은 11일 낮 2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자는 현대중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김종양(52) 씨 등 67명이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를 비롯한 6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동료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11일 오후 7시 현재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2일(목)

호 회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 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손성모(간첩단 사건 18년 복역), 신광수(간첩단 사건 18년 복역) 씨를 비롯한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최호경, 조덕원 씨 등이 석방된다. 또한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문상기 씨와 전 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씨 등이 석방된다.

또한 준법서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형기의 50%를 복역한 장전섭(97년 서총련의장), 김동석(97년 충청총련 의장)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정간첩 심정웅, 노동당 가입전력자 장민철 등은 준법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복역기간이 형기의 1/3이 안된다는 이유로 감형조치됐다.

또한 정부는 정치수배자의 경우 자진출두해서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법질서 준수사항을 사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수배해제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결수의 경우에도 구속취소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남대 한총련 치사사건에 관련된 3인도 석방에서 제외됐다.

현재 기결양심수는 82명으로 알려졌다.

김현철도 사면

정부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사면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전에 비리사건으로 처벌받은 3명도 사면된다.

총 2864명 사면 복권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총 2864명을 석방한다고 밝히고 이중 교도소에 수감중인 1,742명과 공안 및 노동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민권이 제한된 1,112명을 복권시킨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이창복 씨 등이 포함되었으며 현정부 출범이후의 공안관련 사범 231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준법서약서를 작성해 복권된 사람은 230여명으로 알려졌다.

<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3일(금)

제 143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8·15 사면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심수 82명 가운데 56명을 석방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간첩사건, 15년 구금), 안재구(구국전위사건, 5년 구금), 최호경(남한조선노동당, 7년 구금) 씨 등 장기수들을 비롯해 단병호 전 금속연맹노조위원장과 장전설 전 서흥련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석방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면서 한 양심수 대사면 약속과 김현철 씨 사면 논의로 이번 사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양심수 석방에서 준법서약서가 여전히 족쇄가 되었다. 비록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의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석방되게 됐지만 상당수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대사면'이라는 정부의 홍보에 걸맞지 못한 사면 규모에 대해 김현철을 사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자와 양심수는 가두고 김현철 씨 등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하는 행위는 양심과 인권은 가두고 부정과 비리를 풀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국민과 화합할 뜻이 없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남규선 총무 역시 "권력형비리의 상징인 김현철을 대다수 국민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면하면서 양심수들에

게는 구대의연하게 준법서약을 고집해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을 바래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이번 사면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정치수배자들의 경우 법무부의 완강한 준법서약 작성요구로 이번 사

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년 넘게 농성중인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약을 금지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구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노했다.

사면이 발표된 양심수 56명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7명으로 알려졌다. 97년 한총련 치사사건 관련자 3인은 준법서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소문도 요란했던 '대사면'의 푸경을 열어본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민주개혁이 주창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대사면'이 단순히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진정 민주사회를 지향할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의 전제로 삼은 준법서약서, 형기의 50% 복역, 미결수와 정치수배자의 원천적 배제 등의 조건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정권의 편협한 적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결수에 대한 형기 50% 복역이라는 제멋대로의 기준 설정은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을 거세하기 위한 저의를 띠고 있으며, 이런 불관용은 모든 국민이 기뻐해야 할 사면·복권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미결수와 정치수배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결수 석방과 수배해제는 선례도 없으며 사면대상도 아니"라는 당국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12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재판 중이던 123명에 대한 구속취소라는 조치가 취해진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양심수, 특히 노동자에 대한 불관용과는 대조적인 것은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조치다. 확정된 형을 집행도 하기 전에 사면부터 먼저 베푸는 작태는 민주사회 지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구시대 '정실 정치'의 극치라고 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강그리 무시한 이 파렴치범에 대한 아부는 김대중 정권의 일대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수를 A급 파렴치범의 들러리 세우는 악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준법서약제도를 없애고 양심수와 정치수배자에 대한 과감한 관용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김대중 정부를 더 이상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국가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국민회의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기구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되 인권위원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협의하자 올바른 국가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기구는 결과적으로 독립기구가 아닌 법인의 형태"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기구 신설을 의미해 법무부가 지배하는 국가기구가 신설되는 꼴"이라고 알맹이 없

는 국가기구 설치협의를 개탄했다. 소속단체들의 반대성명도 줄을 이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등은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는 법리상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인권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참여와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성애를 들먹였다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전국연합은 12일 오후 7시 기독교회에서 국가보안법 여성피해자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구속이 구속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권·사회·노동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영남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이경(38) 씨는 "8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과 함께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갔다"며 "경찰들은 혼자남은 아들의 처지와 모성애를 들먹이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는데 구속 중에도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지영 씨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90세가 넘는 모친을 만나기 위해 입국신청을 냈으나 정부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자유로운 왕래와 가족상봉마저 가로막는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연합의 손미희 여성국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족과 개인의 삶이 파괴돼 어머니와 아내들이 고통 당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 (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현재 17세로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이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전자지문채취에 대한 헌법소원은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여 전자지문을 채취한 사람 중에서 2달(대략 7월 이후 갱신자)이 넘지 않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최초로 인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은 운동본부에서 책임진다. (문의 02-778-4001)

만화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4일(토)

제 143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 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웅족한 사면으로 끝나버렸다.

특히 국제엠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해 온 손성모(19년 구금, 71세), 신광수(15년 구금, 71세) 씨를 사면에서 제외한 반면 형 집행조차 시작되지 않은 김현철 씨는 사면돼 대사면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했다.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결수에 대한 공소 및 구속취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는 13일, 광화문 종합청사와 김현철 씨 집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70세 고령의 장기수를 석방하지 않고 김현철을 사면하는 것은 절대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 출발이 될 수 없다'며 '제 사회 단체와 연대해 기만적인 8·15사면 조치 철회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양심수를 199명이나 감옥에 묶어 두는 것은 사면일 수 없다"며 정부와 법무부가 이 시대의 과제를 지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정부의 김현철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강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6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개혁지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반발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 8·15 주요 석방자 명단
단병호, 문상기(노동),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조덕원, 최호경(민애진), 이화춘(일본간첩단사건), 민경우(범민련), 김철용, 김동석, 김은희, 김우현, 김광수, 김은정, 김종대, 김창하, 김병준, 김응호, 김승원, 김신우, 김성일, 김성규, 나성진, 노윤조, 오영진, 윤영준, 오순완, 이정은, 임규섭, 이환영, 장윤영, 정우길, 정옥재, 최진선, 정대일, 정원섭, 서주호, 이형준, 양창훈, 이광렬, 조용병, 장전섭, 박선호, 배민균, 표주원, 전병은, 박웅, 박학서, 장길상, 김세룡, 공종배(학생), 문명주, 박종호, 류민희, 이의철, 박효근(국제사회주의자)

◆ 인터뷰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법무부 사면담당자 검찰 3과의 임계장, 이계장 씨 등에게서 이번 사면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았다.

◆손성모(71세, 19년 구금), 신광수(71세, 15년 구금) 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 이들이 남과간첩인 데다가 무기인 형기에 비해 복역한 기간이 너무 짧고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

◆2·25 사면에 비하면(일례로 강용주 씨는 38세에 18년 구금) 나이와 형기가 모두 많은데

- 70세가 넘었다면 재고했겠지만 각각 68세, 69세이며 복역기간도 11년과 10년에 불과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복역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데

- 그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가협 조사에 의하면 손 씨등은 모두 기세로, 구속전 치안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상부로부터 논의하라고 (지시)받은 바도 없다.

◆88년도엔 수배자들의 수배해제가 사면에 함께 포함된 바 있는데

-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그건 그때 상황이다.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가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관 하에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평미군기지도 찾기전국공대위, 무기거래에 대항하는 유럽연대(ENAA) 등 국내외 25여개 단체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했다.

13일 열린 '21 세계 평화의 전망과 평화운동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주장을 간주해 본다. <편집자주>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미국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운동가들은 국가들만이 아니라 민중들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게 위해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민족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전망

(무기거래에 대항하는 유럽연대의 마틴 브룩)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아주 단기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남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많은 이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서방과 남한의 활동가들은 남한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구매를 반대해야한다. 군비확대 계획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도 반대해야한다.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강제적 개입으로 창조되지 않으며 더 많은 군비의 획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군비 거래는 군사문제만 아니라 인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없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안보인지 질문해야만 한다.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미국동포는 동포고 가난한 중국동포는 동포가 아니냐?"

12일부터 재외동포 이기홍(중국 조선족)씨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2조 2항(배제항목)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지배를 피해 고국을 떠났다가 분단상황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해외동포와 그의 후손을 재외동포특별법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고자 단식농성에 합류했다는 김용걸(45) 씨. 그는 중국 휴용각성에 처와 어린 딸 한나(12)를 남겨 두고 작년 4월에 고국을 찾았다. 중국의 친척과 친구에게 돈을 빌려 조국에 왔건만 "후회가 막심하다"고 한다. 돈을 빌어 딸 한나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업도중 부상을 입어 오도기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김씨는 작년 9월 2일 구로 공단의 모 건설회사에서 다투자업을 하다가 지반이 붕괴되는 바람에 추락하여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치료와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성남 중국동포의 집이 없었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김씨. 이처럼 딱한 사정의 재외동포는 비단 김씨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들의 고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도이다.

그런데 고국은 이들을 또 한번 울렸다. 지난 1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특별법 2조 2항(배제항목)의 골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해외동포 총 5백4십만 여명 중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2백6십만 여명의 동포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일 농성장을 찾은 김성재 민정수석은 "대통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회본회의에서는 배제항목이 포함된 재외동포특별법이 통과됐다. 추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김해성 목사는 "재외동포특별법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해외동포에 대한 동족차별과 동족분열을 고착시키는 배제항목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공정하지 못한 배제항목 삭제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8·15 범민족 대회를 이유로 경찰이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을 일삼아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가하고 귀가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대표 오종렬, 상임대표) 회원 485명은 15일 행사를 마치고 지역으로 내려가던 도중 불계이트와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강제로 차를 세운 경찰에 의해 무차별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경찰이 검문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차량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던 버스도 있었는데 서울시경찰청 소속 51중대 전경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차량에 타고 있던 부산연합 회원 전원을 연행했다.

연행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과 흥분 전농부의장,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485명은 관악경찰서를 비롯해 성동, 북부, 송파 경찰서 등 20여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 경찰서 등은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철야 수사를 벌였으며, 청량리 경찰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찰서들은 연행자들의 면회를 금지해 심한 반발을 샀다.

연행자들 중 일부는 16일 오후 10시 현재 훈방, 불구속 등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일부는 아직 조사중이며 약 10여명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경찰의 불법연행은 임신부에게까지 미쳤다. 15일 후배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에 들린 임신 4개월의 이아무개(28, 경기도 하남) 씨는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대 정문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임신중이라고 주장하는 이 씨를 막무가내로 경찰차에 태웠으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4시간 동안 차에 감금시킨 후 다음날 새벽에 풀어 주었다. 이 씨는 "경찰에게 몇 번이고 임신 중이며 후배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그 때마다 '이년, 저년'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왔다"며 "도대체 이 나라가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이 16일 오후 3시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진관스님이 범민련 중앙 통일선봉대 대장이란 이유로 사전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현재 진관스님은 육인동 대공분실에서 범민련 통일추진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연행이 계속되자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가협 등은 16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연행자들을 석방할 것과 인권유린 수사를 중지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8·15연행 구속자 석방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17일부터

명동성당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지난 15일 김현철 씨가 진행 면제로 특별 사면판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철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선잔여자금 70억원을 전액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16일 이 돈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기업들에게 '준조세'식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돈을 대선 자금으로 쓰고 남긴 70억원이 아닌가"고 반문하며 수사당시 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그가 자신의 돈 인양이를 벌금과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행동"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사면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웃었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성명을 내고 김 씨에 대한 사면 취소를 촉구했다.

주요공판안내

- ▶18일(수)
 - 이장희(국보법) 서울지법 형사 4단독 524호 오전 10시 속형
 - 김진욱(국보법) 서울고법 형사 1부 303호 오전 10시 선고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동권조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정부측에서 추천한 아동권 전문가와 민간단체 관련자 1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위원은 "대한민국이 가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인식은 아동권조약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개선의 의지보다는 외교홍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심이 들고 이 보고서는 법 제도에만 치중되어 아동현실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기범 교수(숙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는 "아동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유보하였던 3가지 조항이 5년 전과 마찬가지로"라며 "아동권조약이 존재하나 국내에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구 하나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역시 미비하다"고 밝혔다. 노주희 인권부장(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황산테러나 씨랜드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아동이란 이유만으로 쉽게 잊혀지고 있으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재연 교수(숙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보고서가 제도에 치중되어 아동의 삶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수치화의 부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여아와 장애인 차별, 망명을 원하는 난민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문제가 보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민간측의 지적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인권과장은 "유엔권고에 따라 민간의 의견을 담은 노력을 계속해 고치겠다"고 밝혔으나 "영문으로 고치는데 3-4개월이 소요되니 가급적 검토를 빨리 하자"고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아동권조약에 대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많았으나 마땅한 논의의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권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모임을 정례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권조약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191개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가입에 따른 의무로서 94년에 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아동·인권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담은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간인권흐름

(99년 8월 10일-8월 16일)

1. 사면반대 불구 김현철 햇빛사냥
김현철 잔형집행정지로 결국 사면(13일), 인권·사회단체 뿐 아니라 자민련, 대한변협 등도 김현철 사면반대에 한 목소리 냈으나 쇠귀에 경외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려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 회가 신화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진홍)로부터 유죄판결 받아(13일)

4. 국가인권위 표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회의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대신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 이에 인권공대위는 '법인보다 못한 국가기구'라며 반발(11일)

5. 현철은 풀어주고 노동자는 왜 가두나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등 2인, 방송파업 시 업무방해를 주도했다 혐의로 체포돼 구속(10일)/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방송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15일)/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 씨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선고 받아(13일)

6.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적용 당연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조선족 동포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돌입(12일)

8. 학교는 재단 운영자의 것?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악 통과(10일)로 교육시단단체 반발 잇따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8일(수)

제 143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학내 성폭력 어디까지

학장, 여교수에게 술시중 강요

학장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수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문대학교(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학과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모 아무개 씨는 경문대학 학장 전재욱 씨가 회식 도중 동료 여교수들에게 술시중을 강요하고 여성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여교수들에 대한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모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 씨는 교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결혼을 앞둔 여교수에게 '왜 결혼을 하기 중에 하나', '결혼은 하기 중에 하더라도 애는 꼭 방학중에 낳아야한다'고 한테 이어 '남자아이 낳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속삭였다.

이밖에도 '여자 교수들은 결혼을 해야하고 애를 낳아야하고 집안 일이 바쁘다는 등 말이 많고 비효율적이어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남자들만큼 할 수 있는데'라는 언사에도 회식이 열렸던 식당 주인이 과파라는 사실을 알고는 손을 만지작거리고 술을 따르게 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

모 씨에 의하면 전 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특성화방안 워크샵이 끝난 후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수들만을 지명해 노래를 부르게 했으며 여교수들에게 술을 따르기를 강요했다. 그리고 노래를 마친 여자교수들을 좌우에 앉게 했다.

또한 전 씨는 모든 교수 연구실 문에 작은 창을 내 외부로부터 연구실 내부를 지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교

수들이 반발하자 '교수들에 의한 제자들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창을 낸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문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이용구(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전 씨는 모든 교수들에게 반말을 일삼아 왔을 뿐더러 회식자리 등에서 여교수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는 등 학내 교수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 교수들 사이에서도 퇴진 운동이 벌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여성 역할 고정이 성차별의 원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차갑현수 씨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신성함이 대학내 성폭력을 부추기는 심각한 원인"이라며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점시하거나 차별의 이유로 규정해 여성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회식자리 등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를 한 사람의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으로 보고 남자들의 쾌락을 위하여 술을 따르고 일을 하는 부수적인 대상으로 치부하는데서 연유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 씨의 행위는 충분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모 씨는 전 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 경문대학 학장 전재욱 씨는 재단내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며 학생들은 재단비리의 최결과 전 씨의 퇴임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학교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능력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지난 6월 22일 산재요양 도중 발생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공단 본부 앞에서 20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간부 등 노동자와 학생 26명이 17일 오후 7시 경 영등포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사전경고도 없이 당일 집회 마무리를 하고 있던 농성장에 들이닥쳐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마구잡이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만이 아니라 길 가던 행인들까지 연행되었고, 고 이상관 씨의 부친과 유족들이 강제 납치되어 18일 새벽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행자 가운데는 주영미 공대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김은희(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은주(마침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이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에 좌절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씨의 죽음으로 공단측이 산재노동자들의 보험금 수령 사유를 의심 하며 치료요양기간을 조기 종결하려한다는 비난이 계속되었으나 공단측은 오히려 유족을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격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제엠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16일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사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엠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 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이용되며 또한 많은 시민들의 복권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의 국보법 개정 약속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엠네스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차 요구하며 국보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15일 범민련 통일추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추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추진 행사 일정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축제에 참가했던 것 뿐"이라며 "공안당국이 남북축교류기간 발생했던 일에서 마땅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범민련 행사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16일 범민련 중앙 통일선봉대 대장이란 이유로 옥인동 대공분실 형

사들에게 연행된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 스님에게도 18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컴퓨터 통신망에서도 김씨의 사면과 대선자금 처리 방식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망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는 모두 김씨 사면과 대선자금 처리과정을 비난하는 토론실이 개설되어 있다. 가장 활발하게 토론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천리안 토론실. 지난 6일부터 개설된 '김현철의 8.15 특사에 대해서...'란 주제에 대해 17일 밤 10시 현재 5백61명이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 4일부터 개설된 '수재의연금 사용내용 공개' 토론실에 1백54건이 참가한 것에 비하면 4배나 더 많은 네티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철이를 사면시키려면 지금까지 뇌물이나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 다 풀어주고 나서 사면 시켜야 할 것"(SAMJOON)이라는 원론적인 비난

으로부터 다일공동체가 김씨의 돈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쪽

에서 더러는 돈 받기도 싫다고,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기로 했다(돌려주었나?)고 하는 식으로. 히히, 너무 신나는 이야기"(왕달리기)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의 글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김현철 사면을 결정한 사람들도 김현철과 같은 욕을 먹어야 할 일이다... 아버지는 달걀맛고 아들은 들맛고...후련하겠다."(이경주)라든가 "정말로 궁색한 논리로 사면한 김대중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난 절대 디제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LEON2001)는 반응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 "사면을 죽어라고 강행한 이유는 보름을 들기 위한 것"(RAMJET)이라는 주장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씨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면과 관련해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부정부패의 나라를 만들자. 은근슬쩍 편법으로 사면시키지 말고 아예 처벌을 없애버리자"(늑대)처럼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킹센터의 오병일(29) 기술팀장은 "이런 반응은 네티즌만의 특성은 아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응징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김씨의 행태를 비난하는 격렬한 토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림

- ▷ 예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예바다 운영 이렇게 하자"
 - 때 : 8월 18일(수) 오후 2시 / 곳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예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때 :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곳 : 참여연대 2층 철학카페
- ▷ 아 예바다 그 희망을 위한 1천일(19일)
 - 예바다 1천일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결의대회(종묘, 오후 4시)
 - 예바다 해결을 위한 서울시민 걷기 대회(종묘-대학로, 오후 5시)
 - 예바다 1천일 투쟁 기념 문화축제(대학로, 오후 6시)
- ▷ 예바다 정상화와 1천일 투쟁 기념을 위한 문화 축제
 - 때 : 8월 20일(금) 오후 6시 / 곳 : 평택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19일(목)

제 143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요원이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사람의 입에 총을 집어넣으려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투쟁국장 조준규(화공과 3학년, 22)씨는 이 대학의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를 체포하려던 보안수사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총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보안대원이 자신의 입 속에 총을 집어넣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수배자인 동료 학생들과 뒷산을 통해 학교를 빠져 나오던 중 보안수사대원 8-9명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조 씨는 등뒤에서 '총 쏘'하는 말과 함께 들려오는 총소리를 두 번 들었다. 모두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조 씨는 동료 학생들을 피신시킨 후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해오던 보안대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 씨에게 달려든 보안대원들은 머리와 가슴 등을 총으로 구타했다. 이에 조 씨가 쓰러지자 얼굴과 목 등을 구두발로 짓밟고는 입안으로 총을 집어넣으려 했다. 조 씨의 윗입술은 찢어졌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조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근처에 있던 현세 코란도로 끌려갔다. 1시간 정도 차안에 갇혀있던 조 씨는 함께 있던 요원이 무전기를 통해 '애들을 잡지 못해' 쪽팔린다.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겠으니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잠시 후 보안대원은 '사실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조 씨를 풀어주었다.

한편 영남대 후문 앞에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남대 학생들과 수배자

를 쫓던 나머지 보안수사대원들간에 투석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현장에 있었던 영남대 학생 영 아무개 씨는 "학생들을 향해 요원들이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총기남용 의혹에 대해 수습에 나선 경북도경 보안과는 "수배자 체포를 위한 근무 시 일체 총기를 대어, 휴대한 사실이 전무한 상태"라며 조 씨의 주장 전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투석전에 투입됐던 경북도경 소속 포항보안수사 2대대의 대대장은 대구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과 투석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어, 보안과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남용, 집회현장에서 구타 및 목살 등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조 씨는 "다시 생각하기

도 싫은 끔찍한 일이라서 주변 사람에게 말도 하기 싫다"고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실태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민주노총, 여성민우회 등 13개 여성·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피해자 증언에 나선 유주미 씨는 지난 6월 24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고용승계 집회에서 전경들이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지난 6일 김영화 전 종로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춘마을 철거민 항의집회에 참가했던 이영미 씨는 "전경들이 강제연행 중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이년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며 구타했다"며 "구체적인 목격자 증언을 수집하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경찰서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확인을 피했다.

여성·사회단체들은 오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알림

- ▷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때 :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곳 : 참여연대 2층 철학카페
- ▷ 아 에바다 그 희망을 위한 1천일(19일)
 - 에바다 1천일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결의대회(종묘, 오후 4시)
 - 에바다 해결을 위한 서울시민 걷기 대회(종묘-대학로, 오후 5시)
 - 에바다 1천일 투쟁 기념 문화축제(대학로, 오후 6시)
- ▷ 에바다 정상화와 1천일 투쟁 기념을 위한 문화 축제
 - 때 : 8월 20일(금) 오후 6시 / 곳 : 팽택역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 제시

오늘로 사태 발생 1천 일을 맞았지만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한 '에바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도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더욱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팽택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원투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구 재단측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대로 미치고 있어 정상화가 가로막힌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주관한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는 주제의 토론회가 18일 서울 병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문제의 본질은 시설 설립자가 시설운영비리로 인하여 퇴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상의 경영권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나아가 이들은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운영 기본 원칙,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비리설립자의 경영권 장악이 문제 발제에 나선 이인재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시설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보장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시설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자치모임의 결성 등을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에바다 문제가 이런 "원칙을 무시한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지역인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한 시설의 개방화에 대해 토론회 나선 심재호 교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는 천안 구생원(현 천안 요양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구생원은 정신지체장애인 시설로 98년 8월 시설 보조금, 후원금 등을 수령하여 시설장 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심 교수는 이 사건 직후 천안시, 구생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생원 운영위원회가 제안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시설에서 처음으로 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사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 운영사항들이 낱알이 공개되는 반면, 지역사회가 시설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처음과는 달리 시설측에서도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그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심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주어" 문제를 일으킨 시설 설립자들의 영향력을 분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적 개정 절실 한편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에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 시설 설립자의 사회복지시설 사유재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맹점 개선 △ 비리로 처벌된 시설 설립자 등이 시설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맹점 개선 △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이 에바다 문제 해결방향의 초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 비리자들의 임원 승인 취소 및 영구 퇴출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승인취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면적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 운영위원회 설치 강제화 △ 시설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이사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 강화 등을 명시하고, "비리설립자 등에 의한 시설비리 및 수용자 인권침해 등의 사건 발생 시 제임 임원들의 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이어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발표하며 이후에는 종묘 등지에서 시민권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나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여성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 근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에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여성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8일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보호대상에 대한 존엄 감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향후 여성노동관련법의 실효성 제고와 검토작업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성과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조항이 여성의 취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이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과 아동의 취약한 지위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단언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0일(금)

제 143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이제 에바다를 상식이 통하는 민주 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어 놓아 인 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설비 리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시설 내 비리개 선과 인권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 작한지 1천 일이 된 19일, 서울 시내 에서는 에바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합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장애인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 등 33개 인권·사회·시민 단체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참 여연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용

시설의 일상화된 비리로 인해 장애인 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그 동안 발생한 형제복지원, 수심원, 에 바다 문제 등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해 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에바다 정 상화를 촉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에바다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약 속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에바다 문제가 단순히 시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과 지방자치세력의 비호아래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김 대통령의 에바다 시장과 에바다 비리재단에 대한 특별

수사 실시 △ 비리재단 척결을 가능 케 할 수 있는 에바다 법인 승인 취소 등 정부의 개입 △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자민련의 비호 중단 △ 새 관선 이사장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의 정상 화를 위한 결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는 오후에 종로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에바다 정 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결의대회'를 갖 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대 회사를 통해 "우선적 보호의 대상인 장 애인들이 이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있 으며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 통령의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제 서울 시민을 비롯한 세계 모든 장애인 단체와 연대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시설 비리척결과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대회의'의 김형 수(연세대 4학년) 씨는 "대학 1학년 때 시작된 에바다 농성이 졸업반이 된 지금도 끝나지 않아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 는다면 에바다 문제는 결국 이길 것" 이라며 절망하기 보단 다시 한번 시작 하자고 다짐했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대표로 연단에 선 이경훈(22) 씨는 수화를 통해 "대 통령과 언론도 풀지 못한 에바다 문제 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의 힘 뿐"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 정을 당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대학로까지 행진한 후 미로니에 공원 에서 에바다 1천일 투쟁 기념 문화축 제를 가졌다. 6백여 명이 참가한 문화 제에서는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수화공 연과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비롯, 에바 다 문제 해결을 위한 풍선 터트리기, 촛불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선보였 다. 이 행사는 오늘(20일) 오후 6시 평택역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국가정보원 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19일 오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36) 씨 가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 택, 국정원)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또 다시 공안비랍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주체사상과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김 씨는 지난 7월 조선일보 조갑 제 주필의 주선으로 2년여 생활하던 중국으로부터 입국,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국정원에서 4차례 조사를 받은 김 씨는 2회 체 조사부터 국 정원 요원들이 본래 약속과 다르게 과거 김 씨가 활동했던 반체청년동맹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과 행적을 집중 추궁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9일 오전 출국을 시 도하다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의 구속과 동시에 과거 김 씨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월간 말지 의 조유식(35) 기자도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말지의 한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 말 지에 전화를 걸어 국정원이 자신이 주 사파 노선을 포기한 것을 국정원의 조사를 따돌리려는 위장으로 보고있으며, 과거 활동했던 반체청년동맹과 관련해 김 씨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대대적인 간첩사건을 터트리려 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씨는 "국정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언론인, 변호사 등 사회 중진 인물들 을 묶어 이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을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 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 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보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국정원의 또 하나의 작풍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 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울산지역을 떠돌썩하게 한 최 정남 부부간첩사건의 최정남의 진술

로, 최정남은 체포 당시 "북의 지령을 받아 김영환을 만나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 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 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담당한 호남 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 중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 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제심판취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동법 개악과 관 련해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

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도 문 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해 노사간에 원 만히 해결된 바 있다"며 "노동법 파업 집회를 하고 난지 1년이 지난 후에 유 독 원고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징계 면 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 소(소장 김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 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 됐다"며 "이 판결은 그동안 노동법 개 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판결 을 일정부분 부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씨는 노조위원장이었던 지난 96년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불 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98년 1월 김 씨를 징계 면직했다.

김 씨는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 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편의 손을 들어 회사의 징계가 타당하 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행 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 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일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대통령인 아버지를 믿고 은갖 비리를 저지른 놈은 사면시키면서 김영삼이 나라 맡아먹는다고 퇴진하라고 한 내 아들은 왜 아직까지 잡아놓느냐?"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15일 아침 교도소 앞에서 자식을 기다리다 결국 혼자 되돌아왔다는 이순애(74, 5기 한총련 의장 감위원 모친) 씨는 절규했다. 8·15 대사면 약속을 기대하며 '사라지길' 희망했던 목요일집회. 양심수 가족 들은 19일 오후 2시 또다시 탑골공원을 찾아들었다.

"56명의 사면이 단행되던 날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연행됐다"며 "이번 사면은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에 그쳐 전국 민을 우롱하고 양심수를 모독했다"는 분노 어린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 회)회장의 개회사가 293회 목요일집회를 열었다.

정치수배자 신도훈 씨의 어머니 이일숙(56) 씨는 "김영삼이도 단행한 정치 수배해제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심수 사면은 김현철 같은 비리정치인이 나 권력자들을 풀어주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며 한숨지었다.

"나라 망쳐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보법 개정 반대하며 서명 까지 했더니 기가 막힌다"며 양심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낸 양심수 가족들은 또 다음주를 기약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1일(토)

제 143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국가보안법 개정과 제벌개혁 문제를 놓고 색깔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국보법 개정과 관련하여도 "국보법 폐기에 대한 발상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 발상은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관과 체제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63인은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도 색깔론 시비를 거두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보안법이 마치 가장 위급한 병폐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각급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도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벌해체야말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근본 원인으로 제벌은 경제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한나라당이 이를 반성하기 보단

제벌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수해 또 다시 경제를 파탄시켜도 상관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제벌과 유착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색깔시비 증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돼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온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되어 마땅한 법률인데 인권침해를 방지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보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논의를 가치조차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기협)도 "국보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폐카시즘이자 시대착오적 색깔논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오는 23일 한나라

당사 앞에서 국보법 개정과 색깔논쟁 청산을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색깔논쟁을 정리하지 않는 한 인권사회단체의 항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동티모르, 테러기승 독립안 절대적 지지 예상

동티모르의 미래를 결정할 투표가 오는 8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동티모르의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대다수의 동티모르인들이 자치보다는 독립을 지지하여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군부가 마치못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투표에 승산이 없다고 보는 무장세력들이 인도네시아 보안세력의 비호를 받아 동티모르의 주요도시에서의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은 군사공격과 테러를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군부의 명단을 지명하여 밝히기로 했다. 한편 가택연금되어 있는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구스마오 씨는 20일 서광인문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다수로 선거에서 독립안이 승리할 것으로 관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와 일정

- 8월 노동정책 포럼 안내 '노동조합 민주주의'
 - 일시 : 8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7-9)
- 한나라당의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
 - 일시 : 8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50차 목요집회
 - 일시 : 8월 26일(목) 오후 5시 장소 : 안산역 앞 광장
 - 주최 : 안산민주청년회 (0345-493-5913)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실는다.

사범들에 대해서는 일반경찰이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 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 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동자들과 반인권적 행위 기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에 세워 이들에겐 각각 무기과 17년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있는지 불과 8개월만에 이들이 사면돼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실종, 고문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분개할 일은 정부의 과거의 이러한 인권침해가 현 정부 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법안은 민간기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

기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확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제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산주의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주장돼 국가보안법, 집시법, 제반 노동관계 법률 등에 의해 탄압 받았다. 지금까지 이같은 현상엔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 98년 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부재로 발생하는 담당공무원의 법집행과 일반국민의 인권 의식 부족현상도 인권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들 비롯한 일반국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규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 등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 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처벌함으로써 규약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대히 침해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현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돼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4일(화)

제 144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8·15 사면은 양심수 대사면이 아니라 '김현철 사면'이었다"

8·15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 17명은 23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 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사면된 양심수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의 전형사범인 김현철은 잔형면제로 대사면한 반면 양심수들에게는 준법서약을 강요해 아직도 신평수, 손성모 선생을 비롯한 2백여 명의 양심수들이 철창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며 김현철 사면을 철회하고 석방의 조건이 된 준법서약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복역했던 박종호 씨는 "이번 사면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반노동 정권이며 반인권 정권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김현철에 대한 사면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국전위 사건으로 6년을 복역하고 석방된 안재구 씨도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옥에 있는 듯한 정신적 혼란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손광모, 신평수 선생님 등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원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총청총련 의장을 지낸 김동석 씨도 "국가보안법의 철폐되지 않는 한 양심수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역시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나왔을 뿐"이라며 "이 사회의 민주와 인권을 억압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출소자들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소 양심수들은 감옥에 남아있

는 양심수들과 함께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김현철 사면의 부당성 주장을 위한 관련 규정과 근거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출소자 가운데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사건, 6년 구금), 이화춘(일본 간첩 사건, 6년 구금) 씨 등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보안관찰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보안관찰법 어기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이 프락치 매수공작 시도사건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이같은 입장은 국정원 요원의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발송한 국정원의 명확한 입장전명과 향후제발 방지를 요구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23일 민원담당관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강성석군은 '가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구국의 길' 문건 수사에 필요한 사항만 협조를 부탁하였을 뿐이지 그 외의 일반적인 운동권 동향 등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프락치 활동을 감요한 바도 없다"며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처지도 아니었고 본인이 협조할 의사가 없어 거부하면 그만

인 것을 프락치를 감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상담실장은 "국정원 수사관이 강 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녹음된 두 사람의 전화통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응했다. 또 "국정원의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항의 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국정원 수사관인 이양수 씨로부터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의 근황과 '구국의 길' 제작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프락치 활동을 감요받은 바 있다.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개정 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2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4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머뭇이 금메지를 달고 활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양심수를 가두는 국가보안법을 집권의 발판으로 다시 이용하는 한나라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민가협 임기관 상임의장은 "수십 년 간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철폐도 아닌 개정을 놓고 작당해서 개정 반대 연관장을 돌리는 행위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②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사상 등의 변경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98년 10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행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행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을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향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정부는 위 규정을 이용하여 준법서약을 제출하지 않는 양심수를 대거 사면에서 제외해 왔다. 한편으로 30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 및 조상록, 강용주 등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준법서약을 받지 않고 석방함으로써 준법서약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묵시적으로나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전향제도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감요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8·19조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 보안관찰법 관련부분이 내일 자에 이어집니다.

주요공판안내

- ▶8월 23일(월)
오정은 외 3인 (국가보안법위반 등) 서울지법 417호 오후 2시 속행
- ▶8월 27일(금)
강대우의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11시 속행

주간인권흐름

(99년 8월 17일-8월 23일)

1. 색깔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예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대선 잔금 70억 원으로 벌금, 추징금 등 내고 26억 기부(16일), '담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돈을 내는 것을 헌납이라 할 수 없다'는 비난 및 사면 부당성 지적 이어져

3. 동포의 품을 넓히자

60여 시민단체 기자회견, 중국 조선족, 옛 소련의 고려인, 조선 국적의 제일동포 등 약 280만 명을 제외시킨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해도 너무 한다

에바다 농성 1천일 맞았으나 해결된 것 없어(19일),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1년간 조사사실 폭로(19일)

5. 보안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씨 간첩혐의 긴급체포(19일), 곧 김영환, 조유식 전 <말>기자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21일)

6. 한편으론 풀고 한편으론 조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여성 및 18살 미만 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16일)/대법 법개정 추진, 국선번호인을 선임했다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18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이뤄졌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18일)/노동법 날치기 혐의과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계약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계약제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통과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을 '계약법안'으로 규정하고 철회 서명운동 돌입(18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20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5일(수)

제 144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태보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검찰과 일개 네티즌의 싸움! 이게 삼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ID 태평천국)"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민원실 등 통신란에 게시한 이유로 구속된 시민에게 실태이 선고되자 통신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 감미영(30, 인천시 남동구 구월 1동)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어머니가 조카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를 담당한 인천지검 홍모 검사 등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컴퓨터 통신란에 게재해 무고 등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 기소됐다.

감 씨는 구속당시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 통신검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협이 없음에도 임신부를 구속까지 한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결국 감 씨는 옥중에서 자연유산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 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감미영이다. 나도 잡아라!"는 제목의 글이 뜨는 등 감미영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통신인들은 "최근 김현철 사면이나 환란주범에 대한 완패 등 한국의 검찰이 보여준 것은 실망 그 자체"였으며 "감 씨에 대한 폭압은 열린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적인 문제를 호소한 '민원실' 글을 올린 감 씨에 대한 실태 보고는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한 과징금 적용의 결과라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영경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감 씨에 대한 실태 보고는) 김현철과 비교했을 때 법 집행의 형평성이 전혀 없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

네티즌들은 또한 이번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씨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감론을박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이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의 장여경 씨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통신의 특성상 글에 대한 취사선택과 비판, 논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검열을 시도해 네티즌을 구속, 실태를 신고한 것은 심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번 사례로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돼 선거시기에 대규모 네티즌 구속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유신에 책임을 물을 것

네티즌들은 한편, 감 씨가 수감도중 아이를 유산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위명의 한 네티

즌은 "아이 사산에 있어 재판부의 보석과 치료 거부로 인한 책임도 조사해 사실 확인 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아무개(ID 31311) 씨도 "관결에 상관없이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번 일을 통신공간의 자유를 통제, 침해하려는 검찰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네티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감 씨의 무죄선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반규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위 기관장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어 법은 사문화되었고 4백만 장애인들은 고용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각 기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입장 피력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 말 각 부서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노동자 또 분신

택시정책 사람 죽인다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2년 동안의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등을 관찰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자와의 통신금지, 집회시위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특정한 장소에서의 출석지시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같은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결정하고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을 자유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12조, 제17조, 제18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97년 11월 27일 "보안관찰처분은 대상자의 내심의 자유를 문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보안법 관련 부분이 내일자에 계속됩니다.

구독료 납부로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전국 어디서나 지로번호 7618848

구독문의는 02-741-5363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업자의 이기주의가 또 다시 분신을 불렀다.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택시회사 스타TX 내에서 이 회사노동자 박용순(남, 49세) 씨가 운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 지붕위로 올라간 박씨는 동료 택시기사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액관리(월급제) 실시하고 사납금제 철폐하라!" "업무상 사고처리비 기사부담 웬말이나!"고 외친 뒤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신체의 80%이상이 3도 화상을 입어 24일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스타TX택시는 신화여객(대표 김유동, 세곡동)과 대광운수(대표 김영구, 양재동)가 작년 12월 1일 합병해 24일 현재 166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전 대광운수 택시노동자 안후상(합병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씨는 "대광운수에 근무할 당시 중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지급, 교통사고 발생 시 노동자 부담없이 전액보험처리, 일일 식비 1천8백 원 지급 등 기본적인 후생복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TX는 후생복지가 고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부속비를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또한 택시 기사가 이 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은 오전 근무 시 7만3천 원, 오후 7만7천 원으로 기사들은 택시업계의 통상적인 정액제(통상 7만3천원) 수준을 납입하면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업적금제로 인해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의 20%를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이 회사의 노동자 80% 정도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진만 조직부장은 "회사측은 박 씨가 가정의 불화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택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다루어 더 이상의 택시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위로 차 박씨를 찾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나 전태일이 엄마야" 라고 말하자 박씨는 흐느껴 울었다.

기아자동차 근무 중 작년 5월 29일 분신한 송인도 씨(분신노동자대책위)는 "화상환자의 경우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의 손상으로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 응급실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중환자실로 옮겨 적극적으로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스타TX택시 경영자와 단위노조위원장, 그리고 박씨의 가족은 박씨의 분신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6일(목)

제 144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천주교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등 3인)'는 25일,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25일 현재 성직자 3백75명, 수도자 4백93명, 평신도 1천1백91명 등 총 2천59명이 참가하였다.

선언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천명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 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한나라당의 색깔론 시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성경의 표현을 들어 색깔론 시비를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독사의 족속"으로 정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공의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리한 당리당략적 이념적 논쟁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였다.

천주교연대는 정의평화위원회 등 천주교 산하 52개 단체와 전국 14개 교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만든 연대기구로 미사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는 한편 역, 백화점 등

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곽한왕 총무는 "현재로서는 타종교단체와 연대해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천주교 나름의 내용과 성과를 가지고 추후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연대가 주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기도단(단장 노진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을 출발해 29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에서 국보법 철폐를 위한 릴레이 미사를 갖고있다. 천주교연대는 전 교구 차원의 운동 결과를 모아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9월 14일 경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종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미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실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

혼,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신지체인의 가족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영리한 성적 불구로 만든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도 자식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한다는 두려움을 느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강화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지체장애자전국부모연대회의, 참여연대 등은 25일 대책회의를 갖고, 현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정부의 대책 미련을 촉구했다.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여성·노동·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은 25일 경찰청 앞에서 '성추행 경찰 처벌과 성추행 근절 촉구대회'를 갖고 성추행 경찰의 처벌을 요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중로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과 남양주경찰서장 엄중 처벌 △경찰청장 공개 사과 △재발방지 조치와 경찰관에 대한 성·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련 유기준 정책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성추행한 경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성추행이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이므로 끝까지 싸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8월 7일자 참고)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보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보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권보장을 위한 선언규정을 신설하고(제1조제2항),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추가된 요건 자체가 극히 모호하여 실제로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개정요건은 장식적인 문구로 전락하였다.

여전한 구속자 남발

다음의 통계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후에도 그와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사건 재판 처리결과>

연도 / 기소 / 실행 / 징역 / 무죄	연도	기소	실행	징역	무죄
92	342	138	162	1	
93	136	92	120		
94	403	93	217		
95	226	59	146	2	
96	413	98	176	3	
97	633	176	324	7	

한편 정부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은 이미 최초보고서의 검토(92년 7월)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최초보고서 검토당시에 유엔인권이사회와 각 위원들은 이미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그 문제

점들을 지적하였고, 인권이사회는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후 그해 11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방문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인권이사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서 나타났듯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해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제6조 탈출, 잠입: 김일성 1주기 추모식 참석차 방북 했다는 이유로 고문의 목사의 부인인 박용길 장로가, 방북 중 통일대축전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문규현 신부가 처벌받았다. <내일자에 계속>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제일동포

이젠 뿔가루만 남아 오사가 통곡사 남골담에 자리잡은 한 조선족의 유골 위엔 빛 바랜 처녀 때 사진 한 장과 고향 갈 여비를 챙겨 넣은 듯한 색동주머니가 달려 있다. 생전에 밟아 보려했던 고향 땅을 죽어서도 찾지 못해 좋은 시절 오면 고향 기슭 언덕가에 묻힐 염원을 품고 있을 것이다.

'역사가 멈춘 민족'이란 주제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 안, 민족초급학교 어린이들부터 팔십 고령에 달한 할머니들 즉, 제외동포 1세부터 5세까지의 얼굴들이 웃음으로 맞아준다. 국적 없는 동포이기에 삶이 더욱 고달팠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진 속 얼굴들은 밝기만 하다.

"무국적자로 받는 차별과 삶의 고난을 담고 싶었는데 차별은 보이는 게 아니더군요. 아이들은 중학생만 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된대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예상외로 밝아요. 아이들에겐 아픔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인지..."

4차례 일본을 오가며 조선족을 렌즈에 담은 사진작가 조여권(38) 씨의 소감이다. 조 씨는 "국회에서 의결된 제외동포법이 시행된다면 조선족 등 일제시기 징역과 탄압 등을 피해 이주한 동포 대부분에게 더욱 큰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제외동포법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제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법으로 법 제정 시 절반 이상의 제외동포들을 제외하게 된다'는 반발을 사왔다. 현재 사회 각계에서 이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농성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IN(지구촌동포연대회의)이 주관하는 이 사진전은 제외동포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과 함께 8월말까지 인사동에서, 9월부터는 대전, 부산 등 지방 도시와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7일(금)

제 144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상 인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엔의 권고에 따른 '법인'안을 제차 강조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육

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성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 불가침의 인권 보장 의무에 대한 국가 내부의 자기 수정 기능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법인'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질타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유엔 권고를 해석하고 인용함에 있어 자기나를 성경구절처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조순형 의원 또한 헌법 10조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법무부안은 '공법인'의 본질을 훼손해 국가기관도 법인도 아닌 기형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기구가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정의에 대해 상당수 진술자들이나 의원들이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술자로 참석한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정부권력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재,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부분 역시, 인권위원회와 NGO의 개념을 잘못 인식해 국가기구에 대한 부정적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기도 했다.

분신 노동자 끝내 숨져

택시 노동자 박용순 씨 운명

택시회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분신한 박용순(49, 택시노동자) 씨가 25일 오전 8시 50분 경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운명했다. 고인의 유해는 가족들에 의해 고향인 부여로 옮겨졌다. (본지 8월 25일자 참조)



만화사랑방

이동수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가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3항, 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제7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법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다. 특히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조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을 이롭게 한 자"라고 하는데 반국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각 대학 간부들을 대량 구속하였다. 그리하여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1년 동안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원은 무려 182명에 이르며, 이는 김대중 정부 1년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이나 주권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에 74년 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표현물 중 도서는 1,072종, 그의 유인물은 1,584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도서, 유인물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에 게재한 글, 예술의 영역에까지 이적표현물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 <형법법 관련 부분이 내일자에 계속됩니다.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 음모"라며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가 올 8월부터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에 협력네트워크로 참여하게 됐다.

APC는 민간단체(NGO)와 활동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네트워크로 '환경, 인권, 발전,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를 지향하며 1987년 설립되었다. APC는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세계 민간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여타 통신망보다 훨씬 저렴한 온라인으로 매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전세계에 걸쳐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회원 네트워크와 38개의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133개국 5만여 NGO와 활동가들을 연결하고 있는 APC는 1992년부터 유엔 국제회의에 대하여 컴퓨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을 획득하였다.

진보네트워크의 APC 협력 네트워크 참여로 한국 사회운동의 국제활동영역 확장과 APC를 활용한 새로운 운동형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APC : http://www.apc.org 진보네트워크센터 : http://www.jinbo.net)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28일(토)

제 144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교도관이 미결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미결양심수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25일, 광주교도소 내 미결사동에서 교도관이 검방 도중 미결 양심수들을 밖으로 몰아낸 후 벽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고 배개·소금 등을 강제 수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공안사범 채병욱(99년 조선태 부총학생회장)씨가 "무리한 검방"이라며 행정법 상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22가지 품목을 미결수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채 씨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고 이를 지켜보던 김성환(전남대 96학번) 씨 등 5명의 미결수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10여 명의 교도관들이 김 씨를 둘러싼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김민철(조선대 97학번) 씨 역시 안경이 깨지고 머리를 구타당하였다.

광주 교도소 1·2 미결사동 재소자들은 소 측의 폭력에 항의하여 같은 날 오후 8시 경 "교도관의 폭력적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감방문을 건어차는 일제 항의를 한 뒤 27일 현재 단식 중이며, 김민철, 김성환 씨 등 2명의 미결양심수는 외부진료를 요구하였다.

광주교도소 김현철 부소장은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관련자 가족이나 사회단체 사람들의 면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 등 4개 광주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

합 소속 학생 등 60여명은 광주교도소 앞에서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집회를 갖고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태도 개선, 관련자 문책, 부상자 2인에 대한 외부진료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의 박현정(여, 27)씨는 "교도관들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 죄인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며 "관행화 되어 있는 교도소 내 폭언·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후 광주교도소의 김영수 보안과장은 광주·전남지역 민가협 김정자 회장과 광주·전남 국가보안법철페연대회의 송득룡 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 당시 검방 책임자와 보안과장의 교도소 내 사과방송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8·15와 김현철 사면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 가족 협의회 등 5개 인권단체는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 규탄과 당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8.15사면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컸지만 2백97명의 양심수 중 56명만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을 뿐이며, 형기 50% 미만인 기결수와 미결수, 수배자의 수배해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부패, 경제파국의 주범인 김현철 씨에게는 잔형 면제라는 최고의 사면이 선사되었다고 규탄했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 없다"고 진단한 집회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임기란 상임의장은 "양심수가 풀려나던 8월 15일, 풀려나는 양심수의 열 배에 달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었다"며 "8·15 특별사면은 우리에게 기만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김현철 씨를 석방하기 위해 양심수들을 둘러러 세웠다"고 비난했다.

행사와 동정

-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 보고대회 및 여성노동자 한마당
 -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문의 708-4623)
 - 때: 8월 29일(일) 오후 4시 / 곳: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 북한시랑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회
 - 주최: (사) 좋은 벗들(문의: 587-8996)
 - 때: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12시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향락산업에 유입된 10대 청소년의 사회복귀방안 토론회
 -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문의 708-4181)
 - 때: 8월 31일(화) 오후 2시-5시 /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정법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정법의 개정으로 행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법규는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행정법규가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정당국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으로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법보다는 교정당국자의 지시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더욱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어려워진다. 교정당국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은 결국 현실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정시설

한국의 행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소자 1명의 수용면적은 약 1.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환이나 산부인과질환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의사 1인당 재소자 1,035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교통

95년의 법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이전보다 많은 집견 및 집필기회를 재소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행법 역시 집견 및 집필허용여부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수용시설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교도소나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소장 순시 때 불면사항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는 등 교도관들의 징벌권 남용은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최저기준규칙이나 한국의 행정법규에 의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계구인 연쇄나 차꼬 및 혀수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탈주를 예방한다면 행정법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사용하여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처우규칙, 의무 뿐 아니라 교정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불복신청을 하였다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법은 불복신청제도로서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감시 청원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

으며, 청원을 위하여 집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끝>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 전략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 없는 일시적 수습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노동부가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 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고용창출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사실상 '장밋빛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참가 단체들은 새로운 사회 개발전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보건·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저소득층 소득과약방식의 개발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계측 등의 문제 해결을, 노동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8월 31일(화)

제 144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 8백72명을 직접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사된 북한 식량난민 중 여성의 비율은 75.5%에 이르며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의 경우 90.9%에 달했다. 이들 중 51.9%의 여성이 사실혼 관계이며,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85.4%가 결혼형태의 거주였다. 여기서 '결혼'이라 함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만 주면 다른 여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아 탈북 여성은 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안원을 사칭하고 조선족 여성을 무조건 잡아가 다른 지역으로 파는 사례가 많아 탈북 여성들은 마음 놓고 문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이나 친인척에 의탁하지 않고 일하며 생활하는 북한 난민들은 무노임, 저임금 등 노동착취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난민의 40.9%

는 임금 없이 숙식만을 제공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국인 통상임금의 25~30%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법륜 스님은 "북한 동포의 죽음을 막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가 실업 극복 기금의 백분지 일만 써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나설 것을 확신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 북한 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벗들'은 중국 거주 북한 식량난민이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중국정부의 난민캠프와 같은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협조 △북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부산 구치소 총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공안수와 일반 재소자들간의 충돌은 구치소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천정규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가 28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송모씨(35)를 접견하는 과정에

서 받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5장 분량의 청원서 형식의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이 문건에서 송씨는 "지난 5월31일 부산구치소에서 있었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공안수들과 일반재소자와의 충돌은 구치소측의 사주에 따라 공안수를 길들이기 위해 자신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교도관으로부터 공안수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일반 재소자들이 나서서 맞불을 놓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5월 31일 영남위시건 관련 공안수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사방에 자신을 포함한 일반재소자들이 들어가 무력으로 공안수를 강제 해산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창현 울산 동구경찰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호)' 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월 11일 '김 청장 등 구속자들이 분리이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집단구타가 자행되었고 일부에게는 족쇄가 채워졌다'며 부산구치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송 씨와 같이 있다가 출감한 수감자를 만난 천정규 변호사는 그의 진술이 송씨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송씨의 문건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확신했다.

법무부는 송 씨를 조사한 결과 "송씨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씨먹기 위해 허위로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정규 변호사는 30일 송 씨와 접견 시 송 씨가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구독료 납부로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전국 어디서나 지로번호
7618848**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8월 30일 온 세계의 이목은 인도네시아 옆의 작은 섬 동티모르에 집중됐다. 저녁 무렵 우려하던 바와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주민투표가 끝났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투표소에서 한 주민은 "나는 너무 행복하면서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날은 동티모르인에게 자랑스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한 외국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또 독립운동 지도자인 자나나 구스마오는 "드디어 우리의 오랜 고통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내의 한 특별감호소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며, 이날 경찰의 동행 속에 투표소에 나왔다.

이날 국민투표에는 등록 유권자(45만 여명)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투표가 개시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아침 7시 30분 경에 이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소 앞에 줄지어 섰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애초에 유엔 요원들은 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위협이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난 1월 주민투표 실시가 발표된 뒤 수십 명의 사람이 살해되었고, 투표를 앞둔 바로 지난 일주일 동안만도 열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일련의 유혈사태는 오랜 무장분쟁과 갈등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는 독립을 선언한지 한 달도 안돼 1975년 다시 인도네시아에 강제 점령당했다. 그 이후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한 고문·강간 등은 갖 종류로 신체적·성적·정신적 폭력과 살인에 동티모르인들은 일상은 점령당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 저항운동을 조직했고, 동티모르 안팎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동티모르인의 운명은 동티모르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내게 되었다.

일단 투표는 평화롭게 끝났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한 부분으로 머무를 것이냐 혹은 완전한 독립이냐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일주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행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독립이 결정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서 철수하고 권력을 우선 유엔에 넘겨야 한다. 그리고 유엔은 권력이 동티모르인에게 이양되기 전까지 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랜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유엔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티모르인에게나 인류 모두에게나 동티모르의 앞날은 평화와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주간인권호름

(99년 8월 23일-8월 30일)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적죄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23일)/강철서신의 김영환 씨 사건 관련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번), 심재춘(29, 대학감사) 씨 추가로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23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 발표 (25일)

2. 재외동포법, 더 이상의 '한'을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 (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제차 시위 (27일)

3. 김희로 씨 석방 예정, 차별의 사슬도 함께 풀리길

한국인 차별에 분노해 일본인 야구자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재일동포 김희로 씨 다음달 7일, 복역 31년만에 풀려날 것으로 알려져 (25일)

4. 그대들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일제 군대위안부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채택

5. 통신의 자유 빨간불

인천지법, 청와대가 개설한 사이트 등에 접속한 뒤 인천지검 검사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미영 씨에 징역 1년 6월 선고 (23일)

6. 거짓말 전처에 식욕 잃은 국민

웃로비 청문회에 이어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 역시 겹돌아 진상 규명은커녕 의혹만 증폭, 특검제 도입 불가피 목소리 높아져 (23-27일)

7. 동티모르 눈물의 역사 끝내나

유혈사태 우려 딛고 동티모르 30일 '독립투표' 평화롭게 마쳐, 독립과 자치여부 여부는 오는 7일 발표 (30일)

8. 인권위원회 위상, 줄다리기 여전

5개월 제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열려, 법무부 '법인'안 고집 여전 (26일)

9. 새 부대에 새 술이 되길

진보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29일)